

현 시기 세계체제의 발전경향*

김세균**

현 시기의 세계체제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제1차 세계체제가 붕괴된 뒤 미국 헤게모니 하에서 조직된 '제2차 세계체제의 장기적인 구조적 위기국면'에 해당하며, 초국적 금융자본의 세계적 지배가 관철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적 세계자본주의체제로 규정될 수 있다. 새처주의와 레이건주의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은 과학기술혁명의 성과를 바탕으로 포드주의적 축적체제를 유연적-포스트포드주의적 축적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었고, 이는 초국적자본에 의해 주도되었다. 자본과 생산의 국제화가 확산되면서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증대되었고 세계자본주의에 대한 초국적 자본들의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동시에 자본운동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약화되었고, 국가의 국내적 규제력 역시 크게 약화되었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미국의 금융자본이 중심이 된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한 세계경제의 지배가 전면화되었는데,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적 수탈의 증대는 제3세계를 더욱 궁핍하게 만들고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증대시켰다.

사회적으로 볼 때,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은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소멸시키고 정치를 경제논리에 종속시켰으며, 사회구성원들을 원자화·파편화시켰고, 소득불평등구조를 심화시켜 다수 대중의 '절대적 궁핍화'를 가져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이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노동자계급은 수세적으로 밀리기 시작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신자유주의적 공세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밑으로부터의 저항이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운동은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9년에 있었던 시애틀 반세계화 투쟁을 통

*2002년 11월 7일(목) '일여 구영록교수 1주기 추모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글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관심분야는 정치이론, 유럽정치이다. 저서 및 논문은 《한국 민주주의와 노동자-민중정치》(서울: 현장에서 미래를, 1997) 외 논문 다수이다(연락처: 02-880-6339, e-mail: gimsk@snu.ac.kr).

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연대는 국제적으로 확산되어 밑으로부터의 수평적 국제 연대가 활발해지고 있다.

1990년대에 미국의 호황은 파잉투자와 금융적 수탈 강화에 의존한 것이었고, 결국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과 세계 경제는 장기적 불황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세계자본주의체제의 경제위기가 최종적 위기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한 조건 속에서 미국은 앞으로 더욱 일방주의적·군사주의적 노선으로 경도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이에 대한 다른 중심부 국가들의 반발과 세계노동자·민중의 저항운동이 갈수록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미국의 패권을 대체할만한 국가가 존재하지 않지만, 미국이 적어도 1990년대 이후부터는 그람시적 의미의 세계적 헤게모니국가로 규정될 수는 없다.

1. 들어가는 말

현실사회주의권이 성립된 이후 세계체제는 크게 보아 자본주의적 세계체제와 사회주의세계체제로 양분되었다. 그러나 동유럽과 소련의 현실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고, 남아있는 사회주의국가들이 세계자본주의체제에 통합되고 있는 오늘날 세계체제는 명실상부하게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은 명실상부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성격을 지니게 된 세계체제가 오늘날 어떠한 발전경향을 지니고 운동하고 있는가를 매우 일반적인 수준에서 구명해 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런데 세계체제는 크게 보아 ‘세계자본주의체제’와 ‘국가간체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글에서는 경제체제로서의 세계자본주의체제와 정치체제로서의 국가간체제가 서로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지니고 운동하지만 동시에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운동한다는 관점에서 양 체제의 운동을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할 것이다.

2. 파악의 기본관점

자본의 실재적 존재양식이 ‘무수히 많은 개별자본들의 총체’이듯이, 부르주아

국가의 실제적 존재양식은 ‘(민족국가 중심의) 많은 국민국가들’의 총체이며, 자본주의체제의 실제적인 존재양식 역시 ‘국가적으로 구분되는 여러 자본주의체제들의 총체’이다. 이 규정은 국가운동과 개별자본주의체제들의 운동에 의해 일정하게 지양될 수는 있지만 그 지양은 오직 ‘실재적 존재양식 내에서의 지양’이지 ‘실재적 존재양식 그 자체의 지양’이 될 수 없다. 때문에 부르주아국가는 자국 안보의 도모라는 국가일반의 기능만이 아니라, 이윤획득을 위한 자국자본의 해외에서의 활동을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수단 등등으로 뒷받침하는 일반적인 기능을 떠맡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개별국가들과 개별자본주의체제들의 상호작용이 어떤 운동을 가져오는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점들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개별국가들의 운동은 ‘(부르주아)국가간체제’를 만들어내고, 각국의 자본운동은 ‘세계자본주의체제’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국가들 간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각국 자본들의 세계적 활동이 증대하면 할수록(세계체제를 형성시키는 중심적인 하위체제인) 국가간체제와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체제’로서의 성격 역시 갈수록 더 강화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 형성된 국가간체제의 운동은 역으로 개별국가들의 운동을 재규정하고, 세계자본주의의 운동은 각국 자본주의들의 운동을 재규정한다. 이 사실은 개별국가들의 운동과 국가간체제의 운동과의 관계 및 개별자본주의체제의 운동과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운동과의 관계가 가장 추상적으로는 ‘개별자와 일반자와의 관계’로서 파악될 수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개별자들의 운동은 일반자의 운동을 가져오고, 일반자의 운동은 개별자들의 운동을 재규정한다. 그러나 ‘개별자’와 ‘일반자’와의 관계에서 일반자의 운동은 개별자들의 운동으로 모두 해소될 수 없고, 개별자들의 운동은 일반자에게로 모두 포섭되지 않는다. 이러한 파악과는 달리, 일반자를 개별자들에게로 해소시키는 관점이 ‘방법론적 개인(개체)주의’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이라면, 개별자들을 일반자에게로 모두 포섭시키는 관점은 ‘방법론적 전체주의’ (methodological wholism)이다. 방법론적 개인(개체)주의에서는 개별자들의 운동이 어떻게 일반자의 운동에 의해 재규정되는가를 기본적으로 문제삼지 않는 반면, 방법론적 전체주의에서는 개별자들의 운동이 모두 일반자의 운동에 모두 포섭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문제점을 지닌다. 그런데 국가간체제의 운동을 개별국가들의 운동의 단순한 총화로 보는 관점

이 이른바 국제관계에 대한 '현실주의적' 관점에 의해 대변된다면, 윌러스틴에 의해 대변되는 '세계체제론'은 개별자본주의체제 및 개별국가들의 운동을 세계자본주의체제 및 국가간체제의 운동으로 모두 포섭시키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자유주의이론은 정치를 경제의 단순한 부수현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자본주의체제의 실재적 존재양식이 개별자본주의체제들의 총체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먼저, 윌러스틴 류의 세계체제론이 상정하고 있는 바와는 달리, 기계시대공장의 출현과 산업자본주의로의 이행과 더불어 진정한 의미의 자본주의적 세계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에 기초해 진정한 의미의 세계자본주의체제 역시 성장·발전하기 시작했음을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이윤을 획득할 수 있으면 지구의 심연까지도 찾아가는 자본의 본성과 생산력의 증대 및 교통·물류체제의 발전 등으로 말미암아 세계시장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자본운동의 율동 및 자유주의적 정책과 더불어 보호주의적 정책으로 되돌아가기도 하는 국가개입의 영향을 받아 항상 역경향이 작동하는 가운데에서도) 기본적으로는 확대·심화되는 경향성을 보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개별자본주의체제들 간의 세계적 연관성 및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체제로서의 성격이 경향적으로 강화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개별자본주의체제들 간의 세계적 연관성 및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체제로서의 성격이 강화되면 될수록 개별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세계자본주의체제의 규정력 역시 갈수록 강화된다. 그러므로 '지구적 자본주의'의 출현이 논의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개별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세계자본주의체제의 규정력이 극대화됨으로써 각국 국민경제들의 운동은 세계시장에서 작동하는 가치법칙 및 세계자본주의체제의 발전논리에 결정적으로 재규정당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셋째, 국민국가들 간의 상호작용은 '국가간체제'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국가간체제는 형태상으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관계로 특징지어지는 무정부(anarchy)상태에 속한다. 그러나 국가간체제는 크게 보아 '제국주의국가들'과 (이전에는 대부분 이들 국가들의 식민지였던) '종속국가들'로 나뉘인다. 그러므로 국가간체제는 모든 개별국가들의 상호작용체계이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제국주의국가들 간의 대립과 협력에 의해 규정된다. 이런 가운데 국가간체제의 상태는 크게 보

아 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질서화된 아나키' (ordered anarchy) 상태와, ② 국가들 (내지 각 국가의 지배층들) 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혼돈' (chaos) 상태로 구분될 수 있다. 각국(지배층)들 간의 대립의 격화가 전 세계적 수준에서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대립을 격화시키거나, 아니면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대립이 국가들 (내지 각국 지배층들) 간의 대립을 격화시킴으로써 '각국지배층들 간의 대립의 격화'와 '지배층과 피지배대중 간의 대립의 격화'가 중첩될 때 이 혼돈상태는 가장 심각할 것이 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질서화된 아나키' (ordered anarchy) 상태는 자국 이익의 추구를 최우선시하는 개별국가들 간의 관계 및 자국 중심의 자본축적을 이루려는 개별자본주의체제들 간의 관계들이 국가간체제와 세계자본주의체제에 안정적 질서를 부여하는 특성의 원리나 규범에 의해 규제될 수 있을 때에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세계체제에는 개별국가들의 활동을 통제하는 보편적·세계적 중앙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질서화된 아나키' (ordered anarchy) 상태의 성립과 유지는 국가간체제와 세계자본주의체제에 질서를 부여하는 특성의 원리나 규범들의 수호자가 될 수 있는 강력한 국가 (내지 국가군)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아울러 그러한 원리나 규범이 개별국가들에 의해 기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간체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헤게모니적 권력은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닌 동시에 자국(지배층)의 이익만이 아니라 타 국가 지배층들의 이익을 아울러 보장하고, 아울러 강권적 방식을 사용하든, 아니면 양보책 통합책을 구사하든 (적어도 피지배대중의 저항이 성립된 세계체제의 유지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까지는) 피지배대중을 세계체제에 통합시킬 능력을 지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간체제는 크게 보아 '특정국가(군) 중심의 세계적 헤게모니 지배체제의 성립과 붕괴' 및 '새로운 세계적 헤게모니 지배체제로의 대체'에 의해 특징지어진다.¹⁾ 그런데 한 세계적 헤게모니 지배체제의 다른 세계적 헤게모니지배체제로의 이행은 전 세계적 수준의 위기 출현과 격렬한 계급대립 등이 불러일으키는 지구적 수준의 혼돈상태의 출현에 의해 매개된다. 때문에 그 이행의 절대적 필연성은 존재하지

1) Giovanni Arrighi, "The Three Hegemonies of Historical Capitalism," Review XIII, 3, Summer, pp. 365-408 참조.

않는다.

오늘날에는 지구적 자본주의의 출현 등으로 국가간체제 역시 매우 긴밀해지고 있고, 국가간체제를 넘어서는 국제적 규범과 국제적 수준의 정치레짐 등이 발전하고 있다. 이 사실과 관련하여 네그리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가간체제를 특징지은 '제국주의체제'가 '제국체제'로 이행했다고 진단하고 있는데,²⁾ 이런 견해는 국제적 규범과 국제적 수준의 정치레짐의 발전을 과도하게 평가하는 견해이다. 그러한 견해와는 달리 우리는 오늘날의 국제적 정치질서가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배체제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넷째, 자본주의체제의 발전 메커니즘은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① 자본주의체제의 발전과정은 크게 보면 '자본축적과정'에 의해 규정 당한다. 그런데 자본축적과정은 자본운동 자체에 내재하는 모순의 발현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한 생산력의 폐기과정 등을 동반하지 않는 자본의 지속적인 확대재생산과정으로서가 아니라, 크고 작은 축적위기의 출현을 동반하는 과정, 다시 말해 '자본축적의 순환과정'을 동반하는 과정으로서 나타난다.

② 자본축적과정은 (일국적 수준에서 말한다면) 세계자본주의의 율동에 종속되는 가운데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보호하는 국가의 활동과 제반 제도적·이데올로기적 기제들의 작동에 의해 뒷받침 받는 과정이기도 하다. 때문에 경제위기는 경제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적든 이미 성립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기제들에 의한 사회과정 매개시스템에도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유기적 위기'를 동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경제위기의 규모와 심도가 크면 클수록 유기적 위기의 규모와 심도 역시 커지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유기적 위기가 예를 들어 '전쟁에서의 패배'와 같은 사태에 의해 중첩되면, 그 위기의 규모와 심도 역시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런데 유기적 위기를 거치면서 사회적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재편되는가는 그 위기가 사회발전의 방향을 둘러싸고 갈등하는 계급세력 및 제반 사회세력들 간의 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유기적 위기를 거치면서 이들 계급세력 및 사회세력들 간의 힘 관계가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유기

2) Michael Hardt and Antonio Negri, *Empir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참조.

적 위기를 거치면서 이전에 성립되었던 계급세력·사회세력들 간의 힘 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면 사회적 관계 역시 커다란 변동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성립된 특정한 형태의 사회적 관계는 그러한 유기적 위기의 출현을 매개로 하여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관계로 재편된다. 이 과정은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서는 ‘(특정한 형태의 사회적 관계)로의 구조화(structuring) 내지 배치(arrangement) → 모순들의 전이(displacement)와 응축(cohesion) → 모순들의 폭발(explosion) → 재구조화(restructuring) 내지 재배치(rearrangement)’로 정식화될 수 있다.³⁾

③ ‘자본축적의 순환과정’은 대체로 ‘소순환과정’과 ‘대순환과정’으로 구분된다. 이때 소순환과정에서 일어나는 축적위기는 대체로 ‘생산부분간의 불비례의 증대’가 가져오는 위기나, ‘생산과 소비간의 불균형의 증대’, 즉 ‘과잉생산’ 또는 그 다른 표현인 ‘과소소비’가 만들어내는 위기인데, 이런 형태의 위기는 그간의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대체로 10년 주기를 단위로 하여 발생했다. 이와는 달리 대순환과정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가 이윤총량의 증대에 의해 상쇄되는) ‘장기적 번영국면’ 내지 ‘가속적 자본축적 국면’과, (그러한 상쇄가 이루어지지 않는) ‘장기적 침체국면’ 내지 ‘장기적인 구조적 과잉축적 국면’ (또는 ‘장기적인 구조적 위기 국면’)으로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점들이 지적될 수 있다.

i) 자본주의의 발전은 일회적이고 비가역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그러한 일회적이고 비가역적인 변화에는 ‘생산력의 발전’과 ‘생산의 사회화의 증대’, ‘사회적 노동분업과 노동자계급 분화의 증대’,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의 증대’, 독점자본 지배체제로의 이행과 독점자본지배로 인한 ‘생산력 발전의 둔화 경향’ 및 ‘경제과정에 대한 국가개입의 증대’ 등이 있다. 자본축적의 순환과정은 그러한 일회적이고 비가역적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과정이다.

ii) 그러한 자본축적의 순환과정은 불가피하게 출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순환과정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의 무정부성과 자본들 간

3) L. Althusser, "On the materialsitic Dialectic: On the Unevenness of Origins," For Marx, New York: Vintage Books, pp. 161-218 참조.

의 경쟁에 기인하는 것이고, 경제과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 등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및 자본들 간의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통해 임금인상 등을 어느 수준까지 쟁취하는가는 일반이론적 수준에서 말한다면 구조적 과잉축적 위기를 '촉진' 시키거나 '지연' 시키는 요인이 지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나아가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 등이 아무리 증대할지라도 자본주의경제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성격을 지닌다. 때문에 국가의 경제 개입을 통해 시장적 경제조절을 특징짓는 경제의 무정부성이 폐기될 수 없다. 그러한 개입은 시장경제과정을 조절하는 '가치법칙'의 작동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동을 변형시키는 데에 기여할 뿐이다. 다시 말해 국가의 경제개입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가 만들어내는 경제위기의 표출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출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이 행해지는 조건 속에서 경제위기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의 형태로써 표출되는데, 이는 무엇보다 케인즈주의적인 국가개입의 작용에 기인하는 것이다.

iii) 자본주의의 장기적인 번영국면에 국가는 적절한 경제정책의 강구 등을 통해 생산부문 간의 불비례의 증대가 야기하는 위기를 예방하고, 유효수요의 창출, 실질임금의 인상과 같은 케인즈주의적 개입을 통해 과잉생산·과소소비가 가져오는 경제위기에 대처할 능력을 지닌다. 그런데 유효수요의 창출을 위한 고임금정책의 강구 등은, 임금인상을 위한 노동자투쟁 등과 마찬가지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에 기여함으로써 '자본의 과잉축적 위기'의 발생을 '촉진' 시킨다. 나아가 이윤율의 저하가 야기하는 자본의 장기적인 구조적 과잉축적 국면에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이 이루어지면 사태는 더욱 악화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과잉축적의 위기'에 대처하려면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이 행해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개입이 폐기되어야 하고, 생산기반의 대대적인 혁신, 실질임금의 감축과 해고, 노동시간의 연장과 노동강도의 강화 등과 같은 이윤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요구된다. 이로부터 우리는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가 과잉축적위기 국면에 접어들면서 1980년대에 이르러 그 이전까지 '경제학의 완성' 등으로 칭송 받던 케인즈주의가 왜 하루아침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빛바랜 이론으로 전락하고 말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그런데 과잉축적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실질임금의

감축과 해고 등은 다시 과잉생산·과소소비의 위기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그러므로 과잉축적의 위기는 언제나 과잉생산·과소소비의 위기를 동반한다. — 이처럼 ‘과잉생산·과소소비의 위기’에 대처하는 수단은 ‘과잉축적의 위기’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과잉축적의 위기’에 대처하는 수단은 역으로 ‘과잉생산·과소소비의 위기’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런 사태는 시장경제메커니즘과 자본간의 경쟁에 의해 그 운동이 매개되는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이 지닌 내적 모순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iv) 장기적인 가속적 자본축적의 시기에는 자본들 간의 경쟁이 크게 보면 그것을 통해 서로 혜택을 입는 ‘우애적 형제들 간의 선의의 경쟁’ 내지 ‘비제로섬 게임’(non zero-sum game)의 성격을 지니게 되는 반면, 장기적인 구조적 과잉축적의 시기에는 경쟁은 크게 보면 ‘누가 살고 누가 죽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이전투구를 벌리는 ‘배다른 이복형제들 간의 적대적 경쟁’ 내지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적대적 경쟁 속에서도 위기부담을 노동에게로 전가시키려는 자본들의 운동은 더욱 치열해진다. 그리고 장기적 변영국면은 민중통합적 양보책이 강구될 수 있는 물질적 기초가 주어지는 시기이지만, 장기적인 침체국면은 그러한 물질적 토대가 심대하게 훼손되는 시기이다.

v) 장기적인 구조적 과잉축적 위기가 발생한 시기는 자본의 대대적인 폐기와 가치절하 등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사회적 관계의 전반적인 재구조화 내지 포괄적인 ‘구조단절’(Strukturbruch: Altvater의 용어)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이 시기에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자본의 운동을 매개로 하여 새로운 생산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과정의 급진적이고 전반적인 혁신과, 기존의 기술과 산업에 대한 이른바 ‘창조적 파괴’(Schumpeter의 용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이와는 달리 가속적 자본축적 시기에는 기존의 생산기반이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기존 생산기반의 부분적인 혁신이 이루어진다 — 조절양식과 축적체제는 물론 경제정책적 패러다임의 급속한 변경 등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하여 1970년대 중반의 장기적인 과잉축적 위기를 국가독점자본주의론자들은 ‘국독자적 조절의 위기’로, 조절이론가들은 축적체제의 위기와 특정한 축적체제에 조응하는 조절위기 등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예를 들어 국가독점자본주의

(국독자)론의 입장에 서있는 골트베르크(Jörg Goldberg)같은 이는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위기를 장기적인 구조적 과잉축적의 위기이자 국독자적 조절시스템의 위기로 파악하고 있고,⁴⁾ 조절이론을 수용하는 휴브너와 스탱거(Kurt Huebner, Michael Stanger)같은 이는 주기적인 소위기를 '특정의 조절형태 내에서의 위기'로, 장기적인 구조적 위기를 '조절형태의 위기' 내지 '재구조화의 위기'로 개념화하고 있다.⁵⁾ 이런 지적들과 관련하여, 우리는 조절이론을 이론 구성의 추상도가 높은 단계론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이른바 '중범위이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⁶⁾ 그리하여 예를 들어 조절이론에서 말하는 '포드주의적 조절양식'과 '포스트-포드주의적 조절양식'과 같은 개념은 '국독자적 조절방식'을 구체화시키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파악할 경우, 우리는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을 가장 높은 추상 수준에서는 자본주의 일반의 수준에서, 그 다음 추상수준에서는 단계론

4) Jörg Goldberg, "Chronische Ueberakkumulation von Kapital und die Krise des staatsmonopolistischen Regulierungstyps," *op. cit.*, pp. 10-19 참조.

5) Kurt Huebner/Michael Stanger, "Kleine' und 'grosse' Krisen — These zur Interpretation der oekonomischen Stagnationstendenzen seit Mitte der 70er Jahre," *op. cit.*, pp. 68-75; K. Huebner, "Die Krisentheorien der Regulationisten," B. Mahnkopf(ed.), *Der gewendete Kapitalismus*, Muenster: Verlag Westfaelisches Dampfboot, 1988, pp. 29-73 참조.

6) 자유경쟁자본주의로부터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자본주의 발전단계론은 기본적으로 계급 갈등 속에서도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가 관철되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적 잉여가치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가운데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크고 작은 위기를 넘어서 관철되는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발전추세를 문제삼고 있다. 때문에 이 이론 구성에서는 계급갈등의 전개 및 자본축적의 순환과정이 이론 구성에서 추상화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조절이론은 단계론에서 추상화시키고 있는 계급갈등 및 자본축적의 순환과정을 이론 구성의 핵심적인 대상으로 삼아 위기 출현을 매개로 하여 자본주의의 발전형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상에 나타나는 갈등 등이 어떻게 조절되고 있는가를 문제삼고 있다. 그러므로 두 이론체계는 이론구성외 추상도를 처음부터 달리한다. 그런데 조절이론은 자신의 이론을 추상도가 높은 자본주의 발전단계론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이론체계로서가 아니라 기존의 자본주의발전단계론을 대체하는 이론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 파악과는 달리 조절이론을 자본주의 발전단계론을 구체화하는 이론으로 자리매김하면 조절이론은 더욱 생산적인 이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포디즘체제의 포스트-포디즘체제(내지 유연적 축적체제)로의 이행은 국독자적 문제의식과 결부시킬 경우 '포디즘적 국독자체제'의 '포스트 포디즘적(내지 유연적) 국독자체제로의 이행'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의 수준에서, 그 다음 추상수준에서는 축적체제와 거기에 상응하는 조절양식의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가 야기하는 과잉 축적위기는 국독자적 조절위기나 특정 축적체제의 위기를 넘어서는 자본주의적 생산 그 자체가 만들어내는 위기로서 파악해야 한다.

vi) 자본주의는 대공황의 발생과 같은 파국적 위기를 경과하지 않는 한 장기적인 구조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때문에 국가개입, 국제적 공조의 강화 등에 힘입어 대공황과 같은 파국적 위기의 발생이 저지 당한다면, 장기적인 구조적 과잉축적 국면 역시 그만큼 더욱 길어지지 않을 수 없고 자본주의의 새로운 상승기의 출현 역시 그만큼 지연되지 않을 수 없다.

vii) 이윤율의 저하경향은 자본축적의 전 과정 속에서 작동하는 자본주의 발전의 일반적인 운동법칙이다. 이 경향은 투자의 확대 등을 통해 이윤율의 저하를 상쇄시키려는 운동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자본주의의 장기변영 국면을 성립시키는 기본동력으로 기능하지만, 그 변영국면을 다시 장기적인 불황국면으로 전화시키고, 불황국면이 자본주의의 새로운 변영기로 이어지려면 불황국면에서 대공황이 출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기본 동력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크게 보아 (‘장기적인 가속적 자본축적’이 이루어지는) ‘장기적인 변영국면’과 (‘장기적인 구조적 과잉축적 위기’가 야기하는) ‘장기적인 침체국면’을 경과하면서 발전한다는 점은 콘드라티에프(Kondratieff)가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정리된 형태로 제기하고, 만델(Ernst Mandel) 등이 지지한 ‘장기파동론’ (Lange Welle Theorie)이 이미 지적인 내용들이다. 문제의 핵심은 자본주의가 과연 그러한 장기파동을 경과하면서 발전해 왔는가를 단지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한 그러한 발전경향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정초지울 것인가이다. 장기파동론을 옹호하는 그간의 많은 설명에서는 장기파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경험적인 개념인 데에서도 드러나다시피, 그러한 이론적 정초가 부족했다. 나아가 우리는, 장기파동론의 지지자들이 흔히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자본주의가 그간의 발전과정에서 장기적인 변영의 시기와 장기적인 침체의 시기를 경험하면서 발전해 왔다고 해서 그로부터 바로 직접적으로 미래에도 자본주의가 그러한 장기파동을 경험하면서 발전할 것이라고 미리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특정 시기에 자본주의가 겪고 있는 장기적인 구조적 과잉축적의 시기가 지나면 위기가 행

하는 '자기정화' 기능을 통해 다시 장기적인 번영의 국면이 (준)자동적으로 도래할 것이라고 미리 예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자본주의가 새로운 장기적 번영의 시기를 맞이하려면 흔히들 말하는 '대폭적인 기술혁신' 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본주의는 위에서 말한 비가역적 구조변화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자본축적 조건에 '적응' 할 수 있어야 하고, 과잉축적된 자본이 대대적으로 폐기되어야 하며 — 그러한 폐기를 위한 경제적 수단이 '대공황' 이라면, 그 군사적 수단이 '전쟁' 이다 —, 무엇보다 구조적 과잉축적의 시기에 전세계적 수준에서 격화될 수밖에 없는 계급투쟁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규제해 노동자계급과 피지배대중을 체제 내로 통합할 능력을 지니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대공황의 발생 등은 자본주의가 새로운 번영기를 맞이하기 위한 불가피한 전제이지만, 그러한 사태의 출현은 자본주의의 사망을 만들어내는 불씨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위기를 거치면서 자본주의가 새로운 번영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아무런 사전적 보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위기를 거치면서 자본주의가 새로운 성장국면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그 위기가 자본주의체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인가 등은 오직 역사적으로 설명되고 사후적으로만 확인될 수 있는 '우연적 필연성'의 과정일 뿐이다.

다섯째, 자본주의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일국적 수준을 넘어서서 세계적 수준에서 파악하고 있는 아리기(Arrighi)는 '세계자본주의의 체계적 축적순환' 과 '국가간 관계에서의 세계적 헤게모니의 성립과 붕괴' 와 관련하여 역사적 자본주의의 운동을 분석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하나의 체계적 축적순환은 '(산업자본을 중심으로 잉여가치의 생산이 확장되는) 물질적 팽창국면 → 징후적 위기국면 →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에 따른 이윤율의 저하, 자본의 과잉축적, 국가간 경쟁의 격화로 인해 교역과 생산을 위해 투자된 자본이 화폐형태의 직접적 축적으로 대체되는) 금융적 팽창국면 → 최종적 위기국면' 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자본축적의 물질적 팽창국면은 국가간체제에서 특정 국가에 의한 전세계적 수준의 헤게모니지배체제가 수립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때 물질적 팽창의 지속이 그러한 헤게모니체제의 수립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 되고, 역으로 세계적 헤게모니체제의 성립은 세계적 수준에서의 자본주의의 안정적 성장을 보장하는 정치적 기제로서 기능한다. 이와는 달리, 그러한 헤게모니체제는 '징후적 위기국면' 에 들어가면서 훼손되는 과정을

밟다가 ‘최종적 위기국면’에서는 붕괴하게 된다.⁷⁾ 그의 논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몇 가지 점들이 지적될 수 있다.

① 아리기가 말하는 물질적 팽창국면은 ‘가속적 자본축적 국면’과 일치한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징후적 위기국면’, ‘금융적 팽창국면’ — 이 국면을 아리기는 특정한 형태의 세계적 자본축적체제 하에서의 자본주의의 ‘좋은 시절’ (la belle poche: the beautiful epoch)이라고 부른다 —, ‘최종적 위기국면’은 별개의 국면들로 서가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적 위기국면의 세 작은 국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금융적 팽창국면은 더 많은 잉여가치의 생산이 아니라, 이미 생산된 잉여가치의 금융적 수탈 등에 크게 의존하는 자본축적 국면이며, 그러한 금융적 수탈의 강화는 자본주의 ‘좋은 시절’의 징표라기보다는 그도 인정하다시피 자본축적의 모순을 한층 더 심화시켜 위기의 대폭발을 준비하는 ‘최종적 위기’ 내지 ‘최종적 붕괴’의 징표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② 우리는 아리기를 따라 장기적인 구조적 과잉축적 국면의 한 국면으로서 ‘금융적 팽창국면’을 상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구조적 과잉축적 위기 국면에 들어서면 산업투자를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이 어려워진 금융자본의 산업자본으로부터의 자립화와 이에 기초한 금융적 수탈의 강화가 보편적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우리는 그가 말하는 ‘체계적 축적순환’이라는 개념을 — 그가 그 개념을 세계 자본주의의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지만 — 일국적 수준의 자본주의 운동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그 개념을 가속적 자본축적 국면과 장기적인 구조적 과잉축적 국면으로 나타나는 자본운동의 순환과정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④ 세계체계모니의 훼손과 붕괴는 국가 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것만이 아니라 각 국가의 지배층에 대한 피지배대중의 저항이 격화되는 사태를 아울러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세계체계모니의 훼손과 붕괴는 동시에 최종적 위기국면에서

7) Giovanni Arrighi, *ibid.*; “The Global Market,” *Journal of World-Systems Research*, Vol. 2, 1999, 217-251; *The Long Twentieth Century: Money, Power and Origins of Our Times*, London/New York: Verso, 1994. 그 외 윤소영, 《이윤율의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비판》, 공감, 2001에 실린 이런 저런 글들: 김석진, 《자본주의의 위기와 역사적 자본주의》, 공감, 2001 참조.

제 국가들이 내부적으로 심대한 체제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종적 위기국면에 접어들면 부르주아지의 지배력은 현격하게 약화되고 계급투쟁이 격화하기 때문에 이 위기국면을 거친 후 자본주의의 새로운 발전국면이 열린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이 점에서 우리는 자본축적의 한 순환과정이 종결된 후 자본축적의 순환과정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발전국면이 열릴 지의 여부는 오직 역사적으로만 설명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것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최종적 위기국면에서의 계급투쟁의 결과로서만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여섯째, 우리는 위에서 자본축적의 순환과정이 크게 보아 '장기적인 가속적 자본축적 국면'과 '장기적인 구조적 과잉축적위기 국면'으로 나누어진다는 점,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아리기가 말한 '산업적 팽창국면 → 징후적 위기국면 → 금융적 팽창국면 → 최종적 위기국면'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는 점, 최종적 위기국면을 거친 후 새로운 자본축적의 순환과정이 나타날 지의 여부는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최종적 위기국면에서의 계급투쟁의 결과로서만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지적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러한 자본축적의 순환과정이 세계 자본주의의 성장·발전과 더불어 기본적으로는 '세계자본주의 발전의 순환과정'으로 실현되며, 권역별, 국가별 국민경제의 운동 역시 그 순환과정에 모두 포섭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순환과정에 기본적으로 종속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나아가 세계자본주의체제에서의 자본축적의 순환과정은 개별자본주의체제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산물이지만, 무엇보다도 제국주의국가의 자본운동에 의해, 특히 헤게모니적 제국주의국가의 자본운동에 의해 가장 주요하게 규정된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발전 개관

위에서의 논의를 통해 획득한 이론적 틀에 입각하여 여기서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그간의 역사를 간략하게 개관해 보려고 한다.

1) 제1차 세계체제

아리기에 의하면, 세계체제는 그간 네덜란드헤게모니 체제, 영국헤게모니 체제, 미국헤게모니 체제를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그런데 제1차산업혁명을 가져온 기계제대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그 이름에 합당한 자본주의적 세계시장이 성립·발전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근대세계로의 혁명적 이행기에 수립된 ‘네덜란드 헤게모니 하에서 조직된 세계체제’를 뒤이어 수립된 ‘영국 헤게모니 하에서 조직된 세계체제’를 우리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진정한 출발점 내지 그 이름에 합당한 ‘제1차 (자본주의) 세계체제’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세계체제는 이후 성장, 발전, 위기국면을 거쳐 최종적으로 붕괴되고, 제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 헤게모니 하의 ‘제2차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대체되었다.⁸⁾ 제1차 세계체제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의 점들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이 체제의 발전은 크게 보아 두 국면으로 구분된다. 그 첫 번째 국면은 크게 보아 1870년대까지의 시기로서 제1차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장기적 번영국면’ 내지 ‘가속적 자본축적의 시기’였다면, 그 두 번째 국면은 1987년대 이후의 시기로서 제1차 자본주의세계체제의 ‘장기적 침체국면’ 내지 ‘장기적인 구조적 위기’의 시기로 규정될 수 있다.

둘째, 제1차 세계체제의 제1국면에서는 유럽대륙으로 산업혁명이 확산되고 역사상 최초로 산업자본주의적 발전을 이룩한 영국 등지에서 ‘자유경쟁자본주의’와 ‘고전적 자유주의체제’가 성립되었다. 자유경쟁자본주의와 고전적 자유주의체제는 그 성립기에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제반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나아가 제국주의국가간의 교역관계를 규정한 ‘자유무역주의’에 의해 세계자본주의의 안정적 성장·발전이 확보될 수 있었다.

셋째, 아리기는 1873년부터 1896년까지의 대불황기를 징후적 위기의 시기로 파악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1870년대 초반을 제1차 세계체제가 장기적인 구조

8) 영국헤게모니 하의 세계체제와 미국헤게모니 하의 세계체제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로는 백창재, 성호철, “패권의 부침과 국제질서: 팍스 브리타니카와 팍스 아메리카, 그리고 그 이후”, 오기평 편저, 《21세기 미국패권과 국제질서》(오기평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오름, 2000년, 99-152쪽 참조.

적 위기에 빠져들기 시작한 시기 내지 제1차 세계체제의 제2국면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장기적인 구조적 위기의 도래와 더불어 자유경쟁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로 이행했으며, 강국으로 등장한 독일이 영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미국이 부상함에 따라 영국의 세계적 헤게모니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더불어 제1차 세계체제는 다시 최종적 위기국면으로 빠져들었다. 이 국면에 이르러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했다. 다른 한편으로 이탈리아와 독일 등지에 파시즘체제가 수립되었으며, 1930년대에 최악의 세계적 대공황이 발생했다. 이후 제1차 세계자본주의체제는 (세계자본주의질서의 재편을 위한 파시즘적 제국주의국가군대 자유주의적 제국주의국가군과의 전쟁이자 파시즘체제의 대소공격이 야기한 파시즘국가군대 소련과의 전쟁이었으며, 두 성격의 전쟁이 중첩되는 가운데 파시즘국가군대 반파시즘국가군과의 전쟁으로 발전한)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쳐 미국의 세계적 헤게모니 하에서 성립된 제2차 세계체제에 의해 최종적으로 대체되었다. 제1차 세계체제가 장기적인 구조적 위기국면에 빠져들고 있을 때 이미 세계적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법인자본주의적' 형태로 조직되기 시작했으며, 자동차산업 등을 중심으로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이 보편화되었다.

넷째, 아리기가 '벨 에포크'라고 부른 1896년부터 1914년까지의 시기는 크게 보면 안정적 성장의 물질적 토대가 결여된 '거품 속의 허구적 번영기'였다. 베른 슈타인의 수정주의론은 이 시기의 이런 허구적 번영을 실제적 번영으로 간주하고 그러한 번영이 영구히 지속될 것으로 본 이론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제1차 세계자본주의체제가 아리기가 말한 '최종적 위기' 국면에 처해 있었던 1916년에 레닌은 《제국주의론》에서 '사멸하는 자본주의' 및 '자본주의의 사회주의로의 이행기' 등의 테제를 제출했다. 이런 그의 주장은 제1차 자본주의세계체제의 최종적 붕괴과정을 자본주의체제 그 자체의 붕괴과정으로 과대 해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제1차 자본주의세계체제의 붕괴가 자본주의체제 자체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결정적으로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성장·발전을 지속한 미국의 헤게모니 하에서 세계자본주의체제가 재구축될 수 있었던 데에 힘입은 것이었다. 제1차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제2차 세계자본주의체제로의 이행은 '우연적 필연성'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는 과정이었다.

2) 제2차 세계체제

미국 헤게모니 하에서 조직된 제2차 세계체제는 두 국면으로 나누어진다. 제1 국면은 가속적 자본축적 시기로 불릴 수 있는 197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선진자본주의국에서는 포드주의적 생산체제의 보편화와 생산 제2부문에서의 소품종·대량생산체제의 확립에 기초한 '케인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에 의해,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무엇보다 금융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규제한 '규제된 자유주의' 세계체제 하에서 성립된 '자유기업주의적 국제질서'에 의해 자본주의의 안정적 성장이 확보되었다. 제2차 세계자본주의체제는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장기적인 구조적 불황국면으로 빠져들기 시작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이 위기로부터의 탈출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에는 선진자본주의국에서 유연적 (내지 포스트·포드주의적) 생산체제가 보편화되고 소품종·대량생산체제를 보완하는 다품종·소량생산체제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금융자본의 국제적 이동의 자유에 대한 자유가 제거되면서 국독자체제는 (국독자적 계기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신자유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체제'로 변모하고, '세계적 자유기업주의'는 '세계적 자유기업·자유금융주의'로 대체되었다. '제2차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장기적인 구조적 위기국면'은 한마디로 초국적 금융자본의 세계적 지배가 관철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적 세계자본주의체제'로 규정될 수 있다.

4. 현시기의 세계체제: 제2차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제2국면으로서의 신자유주의시대

1) 신자유주의체제의 성립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지속된 장기호황으로 말미암아 선진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황을 모르는 자본주의'라는 신화가 창출되었으며,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에 의해 불황과 대량실업이 영구히 추방되고 경제위기가 다시는 도래하지 않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가 출현했다는 믿음이 널리 유포되었다. 그러나 1972년과 73년에 있었던 '머니 붐' (money boom)에 의해 재확인되는 듯이 보였던 이러한 신화와 믿음은 1973-74년의 석유위기에 이어 1974년 여름, 1977년 이래 최대규모의 공황이 터짐으로써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 이후부터 세계자본주의체제는 (그 속에서 소폭의 호황과 불황을 거듭하는) 전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장기적인 구조적 위기국면'에 빠져들게 된다.

1974년 이래 세계자본주의체제가 장기적인 구조적 위기국면에 빠져들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증대가 가져온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로 말미암아 투자증대를 통한 이윤량의 증대가 이윤율의 하락을 상쇄하지 못함에 따라 설비투자가 감소하게 되고, 생산성 증가가 둔화하기 시작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나아가 ① 고축적이 가져온 노동수용의 증대와 완전고용의 달성이 노동조합의 교섭력 증대로 말미암아 실질임금을 증대시킨 점, ② 생산라인의 속도증가와 노동유연화의 증대를 통한 노동강도의 강화가 동일한 이유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1970년대에 이르러 노동생산성이 둔화하기 시작한 점, ③ 복지체제의 유지 등을 위한 조세의 증대가 자본수익성을 압박하기 시작한 점 등이 구조적 위기 출현을 '촉진' 시킨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성의 위기가 공황으로 전환된 데에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로 인한 국제 금융질서의 불안정성 증대와 1968년의 노동자 대투쟁이 야기한 '임금폭발' 및 1973-74년의 석유위기 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선진국들은 1970년대 후반에는 1974년의 공황과 더불어 지속된 불황을 기존의 포드주의적 생산체제를 재정비하고 전통적인 케인즈주의에 입각하여 실업 및 도산 증대를 완화하는 것을 통해 극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1980-82년에 재차 도래한 공황은 그와 같은 시도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음을 최종적으로 입증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1980년대에 이르면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세계자본주의체제는 1980년대에 들어와 심대한 구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 시기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구조변화의 내용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로 규정될 수 있다. 이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중반이래 세계자본주의가 심대한 구조적 불황에 빠져든 이후 이 구조적 불황을 자본운동에 대한 일체의 규제를 철폐시켜 해결하려는 선진국

독점부르주아지 내지 초국적 독점자본의 위기타개책으로서 출현한 것이다. 이 신자유주의는 한마디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가 만들어내는 제반 문제점들을 경제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규제나 분배문제의 해결 등을 위한 국가개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제반 조류의 '혁신 자유주의'나 사민주의 등과는 달리) 사회적 관계의 총체를 시장경제적 관계로 재편하거나 시장경제적 관계에 최대한 종속시킴으로써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하려는 현 시기 자유주의의 지배적인 조류로 규정될 수 있다.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 사유화, 유연화, 상품화, 개방화, 경쟁과 효율, 시장 논리 등의 구호로 대변되는 이 신자유주의는 그 주창하는 바의 내용에 있어서는 초기 자유경쟁자본주의의 성립기에 출현한 '구자유주의' (내지 '고전적 자유주의')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고전적 자유주의'가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장기적인 가속적 자본축적 국면 내지 장기적인 성장·발전국면에 출현한 자유주의였다면,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는 세계자본주의의 장기적인 구조적 위기 국면 내지 장기적인 침체국면에 성립된 자유주의이다. 이로 인해 구자유주의가 그 성립기에 제반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는 데에 기여한 진보적 역할을 수행했던 것과는 달리, 오늘날의 '신자유주의'는 자본운동의 자유를 확대시키면서 그 부담을 전세계 노동자·민중에게 폭넓게 전가시키는 반동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자유주의세력 역시 대체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의 제반 모순을 인정하고 그 모순을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 등을 통해 제거하거나 완화하려는 '혁신자유주의적' 입장을 취했었다. 그러나 1974년의 공황 이후 기존의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과 계급타협체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불황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 후반에 이르면 케인즈주의적 국가체제의 해체 등을 공공연히 주창하는 '신자유주의' 세력이 부르주아정치세력을 대표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급속히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들 세력은 전통적인 케인즈주의적 개입과 조정을 신봉하는 사민주의세력이나 혁신자유주의 세력이 위기 타개에 속수무책 상태에 빠진 사태를 배경으로, 그리고 1970년대 중반 이후 강화된 소련의 아프리카 민족해방운동 지원과 아프가니스탄 사태에의 군사적 개입 등이 데탕트에 찬성한 사민주의세력이나 혁신자유주의 세력의 입지를 곤경에 빠뜨리게 된 것 등에 힘입어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주요 선진국에서 집권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들이 집

권함과 더불어 사회구조 및 세계질서의 신자유주의적 개편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와는 달리, 예를 들어 스웨덴 사민주의는 1980년대에 그 위기를 생산과정에 대한 자본의 통제권을 더 한층 제한하고 '임금소득자기금' (wage-earner funds) 정책을 통해 기업소유권을 노동조합으로 이전시키는 것 등을 통해 위기에 대처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시도는 '신자유주의적 위기타개책' 과는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웨덴 사민주의는 ① '자본에 대항하는 혁명' (revolution against capital) 이 아니라 '자본과 함께 하는 혁명' (revolution with capital)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없었고, ② 자본의 사보타지와 생산기지의 해외로의 이동과 같은 자본위협에 점차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스웨덴 사민주의는 사회복지국가의 해체에 강력하게 저항했지만, 유연적 축적체제로의 이행과 더불어 노동자층의 분할이 가속화되고 사민주의적 개혁을 뒷받침한 '민주개혁과 복지를 위한 노동자계급과 중간층의 계급동맹' 이 무너지고 더불어 1990년대 초에 최종적으로 집권당의 자리를 내놓아야만 했다. 이후 스웨덴사민당은 유럽의 다른 정당들과 더불어 신자유주의에 적응하는 정당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런데 1980년대 새정치권 하의 영국에서 사회복지국가체제의 해체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이루어진 반면, 1980년대에 스웨덴에서 그 해체가 가장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고, 이후에도 사회복지국가체제 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훼손된 사실⁹⁾ 등과 관련하여, 우리는 계급적 힘관계의 차이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의 다양한 편차' 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국가로의 이행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 중에서도 불황의 심도가 강하고 노동자계급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영국과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 이를 통해 1977년에 집권한 영국 보수당의 새처수상 이름을 딴 '새처주의' (Thatcherism)와 미국의 신우익운동을 대변한 레이건대통령의 이름을 딴 '레이건주의' (Reaganism)가 신자유주의 운동을 대변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 그 이후 그 이행이 다른 나라들에게로 파급되는 형태로

9) 영국과 스웨덴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김영순, <복지국가재편의 두개의 길>(서울대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참조.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민당세력에 비해 ‘개혁사회주의’의 성격이 보다 강했던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사민당이 1980년대 초에 이미 영국에 이어 집권당의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으며, 유럽 남부지역에서 강세를 보인 우파적 사민주의정당들은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일찍 감치 굴복했다. 그리고 사민주의세력으로서 신자유주의 공세에 가장 완강하게 저항했던 스웨덴 사민당이 1991년 9월의 총선에서 패배하고 이후 신자유주의 공세에 굴복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의 정세변화를 마무리짓는 사태 진전이었다.

계급타협체제와 사회적 동반자관계의 유지에 안주하고 있었던 선진자본주의 사회의 ‘일국적·포드주의적 대중노조’들 역시 대체로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무기력하게 대처하는 가운데 계속 밀리기만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저항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개편의 강도가 약했다. 그런데 사민주의세력이나 기존의 대중노조 지도부가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무기력하게 대처하거나 늦든 빠르든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굴복한 것은 무엇보다 계급타협체제의 구축과 사회적 동반자관계의 구축을 추구한 사민주의운동과 일국적·포드주의적 대중노조운동의 위기와 딜레마를 표시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생산성 향상과 자국 자본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생산입지’의 확보를 통한 경제성장을 계급타협체제와 사회적 동반자관계 형성을 위한 불가피한 전제로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이들은 분배정의의 구현 등을 내세우면서도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2)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의 내용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으로 불릴 수 있는, 1980년대 이후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구조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자본주의의 불황을 타파하고 새로운 성장국면을 맞이하려는 선진국 자본들의 노력은 먼저 이전의 포드주의적 생산체제가 더 이상 적정 수준의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산업구조 전반을 대대적으로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 시기에 선진국에서 이루어진 산업구조조정은 일차적으로 극소전자기술의 발전을 가져온 과학기술혁명의 성과를 생산에 대규모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통해 생산기술을 대대적으로 혁신시킨 것에 의해 특징져진다. 이 과정을 통해 선진국 자본주의는 1980년대를 거치면서 이른바 '하이테크 자본주의' (high-tech capitalism)로 변모하게 되며, 과거에는 '공공재'로 간주된 정보통신산업부문 등이 자본주의적 이윤생산의 핵심영역으로 변모했다. 생산과정의 대대적인 혁신 과정은 동시에 국내외 시장의 불안정하고 세분화된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의 일정한 도입을 가져왔으며, 포드주의적 일관공정 체계가 지닌 기술적 경직성과 노동편제 상의 한계 및 포드주의적 생산체제에서 탈숙련 노동자층으로 균질화되었던 이른바 '대중노동자층'의 저항을 극복하고 생산과 노동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연적 생산체제'의 도입을 동반했다. 이때 노동과 생산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는 노동력의 다기능화를 촉진하고 숙련도를 높임으로써 변화된 생산과정에 적응하는 노동자들의 능력을 제고하려는 '기능적 유연성' (functional flexibility)과, 경기변동과 투자계획에 따라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즉 유연하게 해고하거나 취업시키는 '수량적 유연성' (numeral flexibility)을 높이려는 시도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 자본주의의 생산체제는 1980년대에 이르러 '포드주의적 생산체제'로부터 '유연적 내지 포스트·포드주의적 생산체제'로 변모하게 된다.

둘째, 하이테크 자본주의의 성립과 생산체제의 '유연적 축적체제'로의 전환은 노동자계급의 구성 등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① 노동과정으로부터 산 노동을 대량으로 추방함으로써 절대적 과잉인구 및 취업기회를 영구히 상실한 사회적 탈락층인 상대적 과잉인구를 증대시키고, 불안정 노동의 비중을 증대시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② 이른바 '비물질적 노동' 내지 지식노동의 비중을 증대시키고 정보통신분야 및 문화산업 분야 등에 새로운 노동자층을 형성시키고 있으며, 산업노동자층의 비중을 감소시키고 있다.

③ 고용과 해고 및 노동과정 통제에 있어서의 수량적 유연성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전략의 결과로 정규직 노동자층과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층간의 분할과, 소수의 '다기능 전문기술 지식노동자층'과 (미숙련노동자, 중소기업노동자, 여성노동자, 임시직 노동자, 이민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다수의 '주변부 노동자층'으로의 분할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여성노동이 주로 공식부문을 보완하는 비공식부문에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 여성노동자층은 산업구조개편의 핵심을 이룬 수량적 유연화의 과정의 최대의 피해자층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 전개는 동시에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자들 간의 단결을 어렵게 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력을 크게 강화시켰으며, 이를 통해 자본은 실질임금을 하락시키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데에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셋째, 불황을 탈피하기 위한 자본의 노력은 이윤획득에 보다 유리한 지역과 국가로의 자본의 공간적 이동 내지 자본운동의 세계화·지구화를 크게 촉진시켰으며, 이를 통해 1980년대에 이르러 세계자본주의 체제는 이른바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로 변모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현 시기에 논의되고 있는 '세계화' 내지 '지구화'(globalization)를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세계자본주의가 빠져들기 시작한 장기적인 구조적 불황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유연적-포스트포드주의적 축적체제로의 전환 등에 의해 가속화된 자본운동의 국제화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본운동과 생산의 지구화를 주도한 것은 초국적자본들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자본운동과 생산의 지구화가 진척되면서 세계자본주의체제는 명실상부하게 서로 상쟁하는 초국적자본들의 전일적인 지배체제로 변모하였다.¹⁰⁾ 나아가 자본과 생산 국제화의 이러한 더한층의 진전은 국가들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증대시키고 세계자본주의에 대한 초국적 자본들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불가피하게 자본운동에 대한 '국가적 규제'를 약화시켰으며, 국제적 수준의 자본운동과 지방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에 의한 대내적인 규제력 역시 크게 약화시켰다. 이로 인해 국민국가들의 대외적인 경제적 주권은 물론 대내적인 규제력 역시 이 시기에 이르면 크게 약화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지구화로 인한 국가적 규제력의 약화는 동시에 국가들 간의 협력이나 국가 정상들 간의 회담 — 가장 중요하게는 '서방선

10)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세계 100개 기업은 1980년대 초에 이미 세계자본주의 공업생산의 약 40%를, 외국무역의 약 60%를, 그리고 기술개발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할 정도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김수행, <자본의 세계적 재편과정과 노동자계급>, 《이론》 창간호 (1992년 여름호), 84쪽 참조. 초국적기업의 활동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서는 임광빈, <세계화(Globalization)와 초국적 기업 — 초국적 기업의 세계정치경제전략 비판>, 《세계정치경제》, 제2호, 1995 참조.

진공업 7개국(G-7)회담' — 또는 국제기구로의 권한 이전 등을 통해 국제적 수준에서 생겨나는 제반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적 규제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자본운동의 지구화과정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점들이 지적될 수 있다.

① 1980년대에 나타난 특징적인 현상 중의 하나로서 '지구적 공장' (global factory)이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했다. 이 '지구화공장'은 전지구적으로 분산된 생산활동을 중심부의 모기업이 조정·통제하는 일종의 '국제적 복합기업' 내지 '네트워크기업'으로서 정보통신혁명 등에 뒷받침 받으면서 기술적 우위를 전 세계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외국산지의 낮은 임금과 결부시켜 세계의 여러 기업들을 공급과 생산을 위한 하나의 단위로 조직해 '생산의 유연화'를 전지구적 수준에서 극대화시키고 있는 공장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명실상부한 '생산의 국제화·지구화'를 가져온 이러한 지구적 공장의 출현은 동시에 엄청난 기술개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타 기업들과의 경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직할 목적으로 하나의 지구적 회사가 그 분야의 지도적 경쟁업체와 일시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명시적으로 구분된 부분에서 서로 협력하거나 합동회사를 창립하는 이른바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시켰다. 이러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형성은 경쟁의 압력이 크게 증대한 전자, 전기, 텔레코뮤니케이션 부문에서, 그리고 자동차산업이나 기타 전통적 사업분야에서도 광범하게 이루어졌다.

② 1980년대 이후 자본운동의 세계화·지구화가 가장 급속하게 이루어진 분야는 특히 컴퓨터기술과 텔레코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에 의해 크게 촉진된 금융산업 부문이다. 이 점에서 '제2차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제1국면'을 표시하는 '케인즈주의적 세계자본주의체제'가 금융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최대한 규제하는 특징을 지닌 체제였다면, '제2차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제2국면'을 표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자본주의체제'로 부를 수 있는 1980년대 이후의 세계자본주의체제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체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초국적 금융자본 운동의 자유화·탈규제화는 미국의 금융자본이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세계경제의 미국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미국의 금융자본이 중심이 된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한 세계경제의 지배는 1990년대에 이르러 전면화된다. 이로 인해 신자유주의적 세계자본주의체제는 1990년대에 이르

러 (미국의 금융자본이 중심이 된) '초국적 금융자본의 전세계적 지배체제'로 변모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한 유통과정에서의 금융적 수탈의 강화는 이윤율의 저하가 잉여가치 생산에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세계자본주의체제가 장기적인 구조적 과잉축적위기를 겪고 있음을 역으로 반증하는 것이다. 나아가 초국적 금융자본의 지배로 말미암아 세계자본주의체제는 투기적 약탈이 강화된 이른바 '카지노자본주의'로 변모하게 된다.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한 금융적 수탈의 증대는 한편으로는 제3세계의 궁핍화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세계경제체제를 위기발발에 취약한 체제로 전락시키고 있다.

③ 다른 한편, 1980년대에 들어서서 가속화된 자본운동의 지구화 경향은 각 국민경제들의 전세계적 수준에서의 균일적·보편적 통합이 아니라 특정지역에서 헤게모니자본으로 등장한 자본들을 중심으로 하여 특정 지역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통합되어 가는 '지역블록화' 과정을 동반하고 있다. 유럽 단일시장의 형성,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북미 자유무역지대 협정'(NAFTA)체제의 출범, 동남아시아의 일본경제권으로의 편입의 심화 등은 세계경제의 이러한 지역블록화 경향을 대표한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지역블록화 경향은 자본운동의 지구화가 만들어내는 '세계적 자유기업·자유금융주의' 경향과 대립되는 일종의 '집단적 보호주의'라는 반경향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적 보호주의 경향이 자본운동과 생산의 전지구화라는 세계자본주의의 주 경향을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현 시기에 형성되고 있는 지역블록이란 급세기 초반에 형성된 강한 의미의 '폐쇄적 경제블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구화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형성되고 있는 '개방적 경제블록'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러한 블록화는 더욱 단일화되어 가는 세계시장에서 지역적 헤게모니 자본으로 등장한 핵심부자본들이 전개하는, 날로 격화되고 있는 국제경쟁의 지역적 기반이 되고 있다. 나아가 현 시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신지역주의 경향'은 현실적으로 접근가능하고 조정가능한 자유무역지대를 확보하고 공동경쟁력 확보에 가장 적합한 정책권의 형성을 모색하는 동시에 지역적 중심부 경제와 주변부 경제와의 수직적 분업관계를 유연하게 연결시키려는 과정에서 생겨나고 있다. 이 점에서 신지역주의 경향은 경제적 관계의 유연성을 극대

화하려는 유연적 생산체제에 적합한 일종의 '신축적인 국제분업체계'의 형성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현 시기에 진척되고 있는 신지역주의 경향은 정치적 논리보다는 생산체제와 조절방식의 변화 및 국제분업 환경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관찰되는 경제적 논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지속이 가능한, 세계자본주의의 새로운 발전경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1980년대에 이르러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무역장벽의 제거와 개방화 등을 통해 각국의 국민경제들을 전지구적 생산논리와 세계시장에서의 무한경쟁 논리에 종속시키는 기제가 되고 있는 세계화·지구화가 가하는 거대한 압력 하에 놓이게 된다. 그런 가운데 이 시기에 이르러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불황이 미국과 유럽의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전개됨에 따라 이러한 구조적 불황의 부담이 미국과 유럽의 자본주의에 보다 강하게 직접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남미와 아프리카 대륙의 모든 국가들에게 폭넓게 전가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1980년대에 이르러 남미와 아프리카대륙의 많은 나라들은 1980년대에 심대한 '발전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점에서 1980년대는 이들 나라들에게는 '잃어버린 10년'이 되었다. 실제로 남미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신용차입을 증대시킨 미국 정책으로 인해 국제 이자율이 크게 높아진 반면 선진국의 불황으로 말미암아 자국 상품의 대외수출을 신장시키는 데에 실패함으로써 말미암아 이른바 '외채위기'를 겪게 되고, 그 여파로 차관 도입에 기초한 공업화가 좌절당하는 고통을 겪게 된다. 세계시장에 농산물이나 원자재를 수출해온 아프리카대륙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세계시장에서의 농산물과 원자재 가격의 폭락 및 초국적 금융자본의 수탈의 강화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빈곤의 늪 속에 깊숙이 빠져들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제3세계의 모든 나라들 역시 1980년대에는 정치·경제질서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이 강제되었다. 무엇보다도 1980년대에 심대한 발전의 위기를 경험한 나라들에서는 지원을 받는 대가로 긴축재정의 실시, 개방화, 자유화, 민영화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충격요법을 도입하라는 IMF와 세계은행의 요구를 받아들여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에 착수하였다. 이들 나라는 1980년대에 이르러 자국 시장의 개방과 자국경제의 세계시장으로의 통합을 대대적으로 착수했으며, 차관도입에 기초한 공업화와 수출증대를 통해 내국자본의 축적을 도모한다는 기존의 정책을 포기하고 외국자본의 직접투자 등을 적극

유치하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1980년대에 이르러 이들 나라의 대외적 개방과 세계시장으로의 통합 및 선진자본주의에 대한 이들 나라 나라의 경제적 종속성은 더 한층 심화되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적 위기탈출책은 사회의 저소득층에게 위기극복의 부담을 대폭적으로 전가시키는 조치를 포함한다. 이로 인해 1980년대를 거치면서 이들 나라에서는 소득의 불평등이 크게 확대되고 저소득층은 빈곤의 나락으로 더 한층 깊숙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현실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신자유주의적 충격요법'에 의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한 동유럽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난 사태 발전이었다.

1980년대에 제3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제적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반면,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적 불황이라는 조건 속에서도 세계자본주의체제 속에서 자신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데에 성공했다. 1980년대에 이들 나라들의 수출은 근 3배 가량 신장됨으로써 세계 수출 총량에서 이들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에 4%에서 1988년에는 8%로 상승했으며, 일인당 국민소득은 80년대에 걸쳐 연평균 7% 가량 증대하였다. 이들 나라들이 1980년대에도 계속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불황이 불균등하게 전개됨에 따라 일본자본주의가 호황을 거듭하고, (세계시장의 발전국면에 따라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는 사실과 관련하여) 이들 국가들이 세계시장에 내놓는 생산물들이 이들 국가에게 역설적으로 수출지향적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해 준 데에 기인한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불황의 효과 역시 모든 나라들에게 균등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불균등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가리킨다. 1980년대에는 일본의 직접투자가 대거 이루어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도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들 국가는 '후발 신흥공업국가'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한편, 중국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세계자본주의로의 통합을 추진하고 시장경제적 개혁을 행하면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는데, 이러한 성장 과정이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도전을 받지 않는다면 중국은 미국, 유럽, 일본에 이어 세계경제의 한 극을 이룰 가능성도 존재한다.

1980년대에는 동아시아국가들 역시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 정책 내지 민간시장

에 대한 정부의 지도에 기반한 경제성장 정책을 기본적으로 추구하면서도 개방화와 탈규제화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을 많은 적든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적인 추진 등에 힘입어 신흥 공업국가의 선두주자로 도약한 한국은 세계시장에서의 한국 독점자본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자국시장의 개방을 세계시장에서의 한국 자본의 시장 확대를 위한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세계화·지구화 및 세계질서의 신자유주의적 개편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통해 그러한 발전 추세를 한국 자본주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는 전략을 추구했다. 그리하여 1992년에 출범한 김영삼정권은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과 더불어 '국가경쟁력 강화'와 '세계화'를 국정의 제일의 목표로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민간 주도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자본·금융시장의 조기개방을 추진하고 OECD 가입 등을 서둘렀다. 이러한 정책 추구는 적어도 주관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 하에서 세계화·지구화 과정에 적극 대처해 한국 자본주의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노동자 대투쟁을 불러일으킨 1996년 12월의 노동관계법 개악 시도 역시 노동력 사용의 더 한층의 유연화를 확보하기 위한, 노동자계급에 대한 정권의 대대적인 신자유주의적 공세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국가들 전체가 금융위기와 외환위기에 촉발된 심대한 경제공황에 빠져들면서 세계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자국 자본주의의 위상을 높이려는 이들 국가들의 노력은 커다란 좌절을 맞보게 된다. 이와 더불어 이들 국가들 역시 IMF 관리체제 하에 놓이게 되고, 개방화와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을 강제적으로도 추진해야 하는 조건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집권한 김대중정권 역시 개방화와 신자유주의적 개편의 철저한 시행을 통해 위기로부터 탈출하려는 전략을 추진했다. 이러한 과정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국가체제를 많은 적든 '신자유주의적 기업국가'로 단일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했다. 다른 한편 이들 나라의 신자유주의구조개편 및 이들 나라로의 외국자본의 직접적인 진출 등으로 이들 나라들은 '탈국민적 자본유치국가'로 변모하고 있는데, 멕시코를 비롯한 대부분의 남미국가들이 그러한 국가의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한국 역시 김대중정권 하에서 '국민적 경쟁국가'에서 '탈국민적 자본유치국가'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

다른 한편, 차관도입에 기초한 공업화 등이 좌절되면서 남미지역의 많은 군부 독재정권들은 1980년대에 이르러 민주화투쟁과 노동자·민중투쟁의 고양으로 말미암아 퇴장을 강요당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군부지배체제는 몇 차례의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겪으면서도 계속 유지되다가 1987년 6월 민주화를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부딪쳐 최종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 점에서 1987년 6월의 민주화를 위한 한국 국민들의 투쟁은 1970년 중반이후부터 격화되기 시작한 제3세계 민주화투쟁을 최종적으로 결산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이들 나라에서도 '민주화과정'이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사회구조의 신자유주의적 개편은 제3세계에서 민주화과정의 더 한층의 진전을 방해하고 진척된 민주주의 역시 '형해화·공동화' 시키는 강력한 기제가 되고 있다.

다섯째,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초국적 금융자본 및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정부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계은행과 IMF는 각국의 국민경제를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에 확고히 편입시키고, 이를 통해 세계경제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국제적 경제레짐으로 기능하고 있다. 1993년에는 우루과이 라운드(UR)의 타결을 통해 세계무역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했는데, 이로써 경제적 관계의 지구화는 새로운 발전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국가간에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전면적인 자유화와 개방의 추진을 목표로 삼는 WTO체제는 한편으로는 미국이 국제경쟁력을 지닌 자국산업 부문의 대외적 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지역블록화 등이 가져올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 경향으로 말미암아 세계 자본주의가 파국에 직면하는 것을 막고 그들 모두의 공동이익을 지키기 위해 수립한 새로운 '국제적 경제레짐'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WTO는 세계은행과 IMF 등과 더불어 선진국의 초국적 자본들이 지배하는 세계자본주의체제로 제3세계 전체를 전면적으로 통합시켜 나가는 국제레짐 기구로서도 기능하고 있다. 나아가 자본운동의 지구화가 이루어지면서 세계시장에서 작동하는 가치법칙과 자본간의 경쟁논리에 모든 국민국가들의 운동이 종속되고 있으며, 일국적 수준의 조절을 넘어서는 전지구적 시장의 정치적 조절이 강화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점들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란 포디즘적 축적체제에 기반을 둔 케인즈주의적 국가체제를

해체시켜야 하지만 그 해체를 '파시즘적 대안' 과 같은 노골적인 반민주적 수단으로 행할 수 없는 정치지형 속에서 강구된 불가피한 자본주의적 위기극복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둘째,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 로 규정될 수 있는 유연적 내지 포스트·포드주의적 축적체제란,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의 증대를 절대적 잉여가치생산에서의 일정한 양보와 결합시킨 '케인즈주의적 축적체제' 와는 달리, 변화된 조건 속에서 상대적 잉여가치생산과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 모두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축적체제로 규정될 수 있다.

셋째, 기존의 사민주의체제 내지 케인즈주의적 사회복지국가체제는 장기호황의 조건 속에서 일국 단위를 기본으로 하여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병폐를 국가의 힘을 빌어 제거하고 계급타협 구조를 창출하려고 한 국가체제였다. 이와는 달리, 신자유주의국가체제는 자본운동에 대한 민주적·사회적 통제나 복지국가적 개입의 폐기와 시장논리에 따른 노동력의 유연적 사용 등을 옹호하면서 자본의 국내적·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제반 생산주의적 국가개입을 통해 자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국가체제이다.

네째, 신자유주의국가체제는 (극소전자기술 내지 정보통신의 발전에 의해 대변되는) 과학기술 혁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폭넓게 도입하는 것에 기초하여 성립한 '유연적 내지 포스트·포드주의적 축적체제' 의 수립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1980년대 이래 가속화되고 있는 '자본운동의 세계화·지구화' 에 의해 뒷받침 받고 있거나 그러한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는 현 시기 자본주의의 기본적 발전경향성에 조응하는 국가체제의 성격을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국가체제 하의 국가독점자본주의를 국가독점자본주의체제의 변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본축적의 지구적 논리에 종속되고 사적 자본주의적 측면이 강화된 국가독점자본주의체제' 라고 규정내릴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국가체제가 — 설령 세계자본주의가 다시 새로운 장기적 호황국면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만들어내는 모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진다고 할지라도 — (신자유주의체제에 대한 대중의 저항이 고양되어 그러한 체제의 유지가 더 이상 불가능해 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세계자본주의체제를 지탱하는 자본주의국가의 기본적인 국가레짐형태로서 기능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설령 사민주의세력이 집권한다고 할지라도 이때 수립되는 사민주의체제는 신자유주의적 요소들을 대폭 수용하는 '신자유주의적 사민주의체제' 이상이 되기가 어렵다. 실제로 이러한 사정은 미국의 클린턴정부가 레이건정부의 정책을 여러 면에서 교정하려고 시도했지만 그 시도가 신자유주의체제의 결함을 부분적으로 교정하는 것 이상으로 더 나아가지 못했고, 1990년대에 영국의 토니 블래어(Tony Blare) 정부와 프랑스의 조스팽(Jospin) 정부와 같은 좌파정권들이 서유럽에 들어섰지만 이들 정부가 신자유주의에 대항하기보다는 신자유주의적 개편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면서 그 병폐를 완화하려고 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일종의 '순응전략'을 채택한 사실 등에 의해 확인된다. 그리고 우리는 사민주의가 신자유주의에 굴복하고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 이를 우리는 '사민주의의 신자유주의로의 수렴현상' 내지 '신자유주의에 의한 사민주의의 포섭'이라고 부를 수 있다 — 신자유주의체제 하에서 지배블록은 신자유주의적 부르주아세력과 신자유주의적 개편을 지지하는 사민주의세력(과 노조 상층지도부)간의 '신자유주의적 지배연합'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최근에 들어선 유럽의 좌파정권이란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좌파'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지배연합 내에서의 좌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은 계급타협과 사회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지지하는 노조지도부 역시 공유하고 있는 측면이기도 하다.

다섯째, 사회구조와 세계질서의 신자유주의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계급적 힘은 초국적 자본으로 대표되는 선진국 독점자본과 보수적 자유주의세력 일반이다. 이들 신자유주의세력은,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이란 경제의 비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순수실만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면서 기업 활동에 대한 '탈규제화'와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폐기 내지 축소, 국·공유기업의 민영화, 제3세계의 경제적 개방과 자유화를 요구하며, 노동력 사용의 경직성을 없애기 위해 노동력 사용의 유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개인적 욕구들과 사적 책임'에 기초한 시장적 관계를 모든 사회생활의 조직원리로 상승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생활 전반의 사적 책임화 또는 상품화,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의 해체, 복지국가의 해체 등을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닌 대중적 기반은 시장경제 체제를 지탱하는 '소유적 개인주의 이데올로기'와 '국제경

쟁력 이데올로기' 등이 대중에게 발휘하는 이데올로기적 힘이다. 소유적 개인주의 이데올로기는 신자유주의가 '이국민적 전략'에 입각하여 공공아파트의 사유화 등을 추진하고 노동자대중의 일부를 주식소유자화시킴으로써 중간층과 노동자대중 상층을 포섭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었다. 나아가 신자유주의체제는 사회구성원들 간에 경쟁을 강제하고 시장경제적 관계에 적응하지 못하면 탈락한다는 경제적 강제에 결정적으로 의존하는 체제의 성격을 지닌다.

여섯째, 신자유주의는 적어도 이념적으로는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을 일절 배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실패 역시 시장에 내맡겨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자유주의가 주창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경제과정의 조정', '야경국가' 등을 자신의 이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생산의 사회화가고도로 진척되고 독점자본의 지배가 자유경쟁 메커니즘의 작동을 항상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는 오늘날의 조건 속에서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적 조절' 만으로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고 시장적 조절을 보완하는 경제에 대한 '국가적 조절' 내지 '정치적 조절'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 점에서 오늘의 신자유주의는 실제로는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복지국가적 개입이나 자본운동에 대한 사회적·민주적 규제를 배제하고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을 '시장주의적·기업국가적 개입'으로 한정시키려는 이념으로 기능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신케인즈주의'로 불리기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때문에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신자유주의자들의 물신숭배적 옹호론은 자본운동에 대한 사민주의적·혁신자유주의적 통제에 반대하지만 기업의 기술혁신 과정을 지원하고 기업의 경쟁력이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이른바 '공급측면'에서의 '자본후원적 경제개입'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70년대 말부터 수립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국가체제는 경제를 '보이지 않는 손' 자체에 내맡기기보다는,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사민주의적·혁신자유주의적 규제를 해체시키면서도 국가적 수준에서 산업구조 조정과 생산과정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조직하는 국가체제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 점에서 우리는 신자유주의국가를 산업의 구조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생산과정의 혁신과 자본주의적 합리화를 추진하고, 시장경제적·생산주의적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기업국가' 내지 밥 제습(Bob Jessop)이 말한 '슈페터적 근로국가' (the Schumpeterian Workfare State)로 규정할 수 있다.¹¹⁾

일곱째, 제3세계의 자본주의화가 진척된 조건 위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관철되고 (애초에 세계자본주의체제와는 구분되는 세계사회주의체제의 형성을 시도하다가 점차 세계자본주의체제에 재포섭되어 간) 현실사회주의체제가 최종적으로 붕괴함으로써 1990년대에 이르러 세계자본주의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외부를 지니지 않는 명실상부한 유일 세계체제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네그리와 하트는 이 과정을 '제국주의로부터 제국으로' 라는 용어로 개념화하고 있다.¹¹⁾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세계체제가 제국적 성격을 갈수록 더 많이 지니고 있지만 세계자본주의체제를 유지시키는 중심적 정치권력이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제국주의적 국가들의 정치권력이라는 점에서 오늘날의 세계체제를 '제국' 이라기 보다는 '신자유주의적 제국주의체제' 로 규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신자유주의적 제국주의체제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중심부국가들이 세계체제를 유지·재생산시키는 핵심적인 정치권력으로 기능하고 있고, 세계시장의 법칙과 논리를 성문화시킨 범규범 등이 모든 국가들에게 적용되는 초월적 범규범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그 규범을 집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레짐들과 그러한 레짐들을 떠받치는 '세계시민사회' 가 형성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개별국민경제들이 초국적 자본의 직접적인 지배 하에 놓이고 있고, 모든 국가의 자본들이 이들 자본의 하위 동반자로 편입되고 있다. 그런데 세계자본주의체제가 비록 제국적 성격을 보다 많이 지닌 제국주의적 지배체제로 변모하고 있지만, 이 체제를 카우츠키나 부하린이 말한 바와 같은 '초제국주의체제' 등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제국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불황이 장기화됨과 더불어 초국적자본들 간의 경쟁 및 제국주의국가들 간의 경제전쟁 역시 격화되고 있다.

여덟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진척은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금융적 약탈의 대폭적인 강화, 대다수 인류의 절대적 빈곤층으로의 전락 등을 동반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모순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계급적·민족주

11) B. Jessop, "Towards the Schumpeterian Workfare State," 1993: 김호기 역외 편역, 《포스트 포드주의와 신보수주의의 미래》, 한울, 1995; B. Jessop, "The Transition to Post-Fordism and the Schumpeterian Workfare State," in: R. Burrows and B. Larder (eds.), *Towards A Post-Fordist Welfare State?*, London: Routledge, 1994 참조.

12) Michael Hardt and Antonio Negri, *ibid.* 참조.

의적·지역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여성문제, (주로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인종문제, 환경문제 등을 전 세계적 수준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그런데 더 이상 외부적 식민지가 존재하지 않게 된 오늘날의 세계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제국주의적 지배는 '외부식민지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자본주의적으로 포섭된 세계 체제 하에서 전 세계적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내부식민지에 대한 지배'의 성격을 지닌다.

3)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의 사회적 결과

사회질서 전체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은 다음과 같은 사회적 결과들을 산출하고 있다.

첫째, 국가가 '주식회사 국가'의 성격을 지닌 신자유주의적 기업국가로 변모함과 더불어 시장경제적 논리에 대한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이 소멸되고 있고, '경제논리로의 정치의 종속'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자유주의기업국가는 자본에 대해서는 자본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약한 국가'로 기능하면서도, 노동과 피지배대중에 대해서는 사회구조의 신자유주의적 개편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뒷받침하고 그 개편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하거나 탄압하는 데에 앞장서는 '강한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 국가체제는 오늘날 어느 나라에서나 많은 적든 '신자유주의적 권위주의국가' 내지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종속적 신자유주의국가에서 국가체제의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로의 전화는 한층 더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은 사회구성원 모두를 '소유적 개인'으로 원자화·파편화시키고 있으며 — 이 점에서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자들은 물론 이런 저런 포스트주의자들이 강조하기 시작한 이른바 '개인적 주체성'이란 이러한 '소유적 개인'들의 철학적 미화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이들 개인들을 경쟁논리와 업적에 의한 보상체계 하에 종속시키고 있다. 나아가 모든 나라에서 거의 예외 없이 경쟁, 효율성 등이 절대시되고 있고, 부가가치 내지 이윤 창출에 기여하는 것만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시장경제적 논리가 전사회적으로 관철되고 있으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상품

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시민사회가 신자유주의적 개편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기반이 되면서 '시민사회가 활성화되는 속에서 시민사회가 실질적으로 소멸하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 새로운 유형의 시민사회를 시장적 가치만을 절대시하고 그 가치에 따라 사회적 관계 전체를 주형하는 '시장 전제정 사회', '시장주의적 전체주의사회' 내지 '시민사회적 전체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시민사회적 전체주의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권위주의국가 체제'의 사회적 기반이 되고 있다.

셋째, 정치·경제질서의 신자유주의적 개편과정은 어디에서나 소수 독점자본으로의 부의 집중과 소득불평등구조를 심화시킴으로써 다수대중의 생존권을 항상적으로 위협하고 다수대중의 '절대적 궁핍화'를 가져옴으로써 무엇보다도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키고 있고 '사회의 황폐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 과정은 노동자·민중의 사회적·정치적 권리가 훼손되는 과정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해 1980년대 이후 선진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민주주의의 더 한층의 발전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질적 후퇴가 이루어지고 있고,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훼손되는 만큼 민주주의의 형해화·공동화 역시 진척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개편이 노동자층의 분화와 차별화를 촉진시키면서도 사회를 '20 대 80의 사회'로 만들고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우리는 그러한 분화와 차별화가 크게 보면 '사회의 양극화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적 관계의 총체가 시장경제적 관계로 재편하거나 시장경제적 관계에 종속되고 있고 가치창출이 가능한 모든 것이 상품화되고 있는 과정은 동시에 '화폐권력의 전능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사회에서 화폐권력이란 사실은 자본권력의 외화형태이다. 그런 만큼 시장적 관계로의 전일화는 사회 전 영역의 자본권력에서의 포섭과 자본권력의 강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시장적 관계로의 전일화 과정은 자본 지배의 모순을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다섯째, 불안정노동자층의 빈민화와 영구적 실업층의 증대와 더불어 이들 빈민층의 우범화 등이 광범위하게 진척되고 있고, 이들 사회적 탈락층을 중심으로 인종주의적 차별운동이나 신파시즘 운동이 대두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실사회주의

의 붕괴와 연동되면서 '범죄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등이 '대내적 안보'를 위한 국가개입의 가장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고 있다.

여섯째, '20 대 80의 사회'로의 전환은 일국적 수준에서만 아니라 전세계적 수준에서 진척되고 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적 개편은 중심부 독점자본의 이익만이 아니라 세계시장 속에서 자기증식 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종속국가의 독점자본들의 이익에도 기본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적 구조재편을 오직 제국주의자본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로 인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진척과 더불어 중심부국가와 종속국가들 간의 격차 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미국의 초국적 독점자본 중심의 독점자본 대 전세계 노동자·민중간의 대립구도가 지구적 수준의 가장 중요한 대립구도로 부각되고 있다.

4) 신자유주의 시대의 저항운동

앞에서 우리는 선진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민주의세력과 대중노조들이 1980년대에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체로 무기력하게 굴복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국에서 새처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해 광산노조가 고립무원 속에서 1여년 간에 걸쳐 행한 완강한 저항이 패배하고, 레이건 정부 하에서 일어난 미국 항공노동자들의 파업이 실패한 후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대중적 저항은, 나라에 따라 차이를 지니지만, 어디에서나 약화되기에 이른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1980년대와 90년대 전반은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노동자계급이 어디에서나 수세적으로 밀린 시기로서 규정내릴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정세는 변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이르면 신자유주의적 공세가 안겨주고 있는 피해가 누적되면서 그 피해의 제거를 위한 밑으로부터의 저항이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특히 세계자본주의의 불안정성 및 노동자·민중 착취가 증대하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계급문제만이 아니라 환경문제, 여성문제, 인종문제 등을 격화시킴과 더불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 역시 전 세계적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로 증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정치적 공백과 정치적 대안의 부재 및 자본·국가·노동관료주의라는 3중의 압박 속에서도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증대하고 있다.

1994년 11월의 연금제도 개악 등에 항의한 이탈리아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저항 및 199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속된 프랑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투쟁은 그러한 저항의 출발점을 이루며, 임금삭감 등에 반대한 이탈리아 노동자들의 투쟁, '독일식 고등분담론'에 저항한 노조 투쟁, 미국 노총지도부의 교체, 정규직 노동자직의 확대를 위한 미국 운수노조의 파업, 호주 항만노동자들의 파업, 프랑스 등지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한 실업자운동 등이 그러한 투쟁의 대표적인 사례들에 속한다. 이러한 투쟁들은 노동자대중이 자신들의 불만과 요구를 제도화된 신자유주의적 지배구조 및 신자유주의적 지배연합 속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과 노조를 통해 국가로 대변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됨에 따라 대체로 그러한 제도적 틀을 깨는 '직접적인 대중투쟁'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투쟁은 대체로 사민당이나 노조 상층부의 통제를 넘어서는 투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노조 상층부가 이들의 불만이 자신들에게로 향하거나 이들이 조직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투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제도적 틀을 깨고 나오는 노동자들의 '직접투쟁'은 잠재적으로는 체제 내적 운동의 한계를 벗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그런 투쟁은 적어도 잠재적으로는 자본주의적 계급질서 자체에 대한 저항 내지 '대항권력'의 창출을 위한 투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투쟁이 실제로 대항권력의 창출을 위한 투쟁으로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가는 이들의 투쟁이 앞으로 얼마만큼 시민주의적·계급타협주의적 노조의 통제를 벗어난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투쟁의 발전수준이 현재 어느 정도가 되든, 이러한 투쟁들은 이전에 이미 죽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온 노동자계급 운동 내지 노동자계급 정치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나아가 이에 힘입어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사회운동의 중심이 신사회운동으로부터 노동자대중의 계급운동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편, 계급타협주의적·노사협조주의적 노조들 역시, 신자유주의적 개편을 기본적으로 지지하면서도 그 피해를 사후적으로 최소화하려는 자신들의 제안이 자본과 정부 측에 의해 수용되지 않는 사태에 항의하고, 대중의 불만이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쟁을 조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실업자의 대량 방출과 비정규직의 증대 등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실업자운동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역시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

다. 이 과정은 실업자운동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앞으로 대중운동의 가장 전투적이고 가장 급진적인 부분으로 형성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둘째, 지도부의 교체나 새로운 노조의 성립 등을 통해 계급타협주의적·노사협조주의적 노선에 반대하고 적어도 노동자들의 생존권의 확보에 관한 한 전투적 기풍을 되찾고 있는 노조들이 생겨나고 있다. 짧은 시간 내에 제2의 전국적인 노조조직으로 성장한 프랑스의 '민주주의, 연대, 투쟁'의 결성 등이 그러한 사태 전개에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셋째, 신자유주의적 구조 전체를 시장경제적 관계로 재편하거나 시장경제적 관계에 종속시켜나감에 따라 사회의 여러 부문, 영역에서 탈상품화, 공공성의 확보 등을 위한 신자유주의반대투쟁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투쟁들과 노동자대중의 생존권확보투쟁이 서로 연대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넷째, 대중투쟁의 활성화와 더불어 신자유주의로 수렴되고 있는 시민당과 기존의 공산당과 같은 '제도좌파'를 대신하여 좌파혁신운동이 — 비록 노선 상의 차이 등을 크게 드러내고 있지만 — 기존의 비제도적 좌파세력들을 중심으로 '재구축' (refoundation), '재구성' (recomposition), '재편' (realignment, regroupment) 등의 이름으로 선진국만이 아니라 세계각지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1997년에 출범한 '미국노동당' (LPUSA), 이탈리아의 '재건공산당', 1989년에 조직된 덴마크의 '적록동맹', 스페인의 '통합좌파', 1999년에 결성된 포르투갈의 '좌파블록', 2000년 10월 캐나다의 활동가들이 조직한 'Structured Movement for Anti-capitalist Left', 1999년 6월 프랑스의 주요 트로츠키조직인 LO와 LCR의 유럽의회진출을 위한 선거연합, 1999년 스코틀랜드 사회주의당(SSO)의 의회진출, 선거연합인 '사회주의 동맹' (Socialist)으로의 영국좌파들의 결집 등이 이러한 움직임의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제도권 좌파의 새로운 움직임으로서 커다란 중요성을 지닌다.

다섯째,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는 제3세계 및 동유럽에서도 오늘날 신자유주의에 대항하여 무엇보다 생존권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민중의 저항이 활성화되고 있다. 멕시코의 사빠띠스마운동이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대한 제3세계 농민투쟁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1996년 말과 1997년 초의 한국 노동자계급의 총파업 투쟁은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한 제3세계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일련의 투쟁(푸에르토리코, 아르헨티나) 및 2001년의 불가리아 노동자들의 민영화반대 총파업투쟁 등 역시 중요성을 지닌다.

여섯째, 상층간부 중심의 국제연대가 아니라, 활동가들 간의 (밑으로부터의) 새로운 수평적인 국제연대가 활발해지고 있다 — TIE 등이 대표적인 조직임 —. 이러한 연대에 힘입어 다국적 기업의 신자유주의적 경영합리화 등에 저항하는 노동자들 간의 국제적 연대투쟁이 새로운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일곱째, 노동자·민중의 투쟁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야기하는 제반 문제들의 해결을 요구하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사회운동 — 여성운동, 환경운동, 인종차별반대운동 등등 — 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운동들 간의 국제적 연대투쟁이 활성화되고 있다. 1999년의 시애틀투쟁에서 2000년 워싱턴, 뮌헨, 프르하, 니스 등에서의 투쟁, 2001년 8월 이탈리아에서 G8 정상회담에서의 격렬한 투쟁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국제연대투쟁은 WTO, IMF, 세계은행 등의 초국적 기구들의 주요 회의가 열릴 때마다 조직되고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1년 단위의 공동 행동의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등 점점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사민주의적 대응프로젝트는 오늘날 일국 수준에서는 '제3의 길론'을, 세계적 수준에서는 세계시민사회의 형성을 통한 국제적 정치체의 민주화, 즉 참여를 통한 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에서의 사민주의적 개혁이나 '부드러운 신자유주의체제'의 수립을 지지하는 부르주아적 NGO운동 역시 이런 노선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급진적인 부분은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서의 사회주의,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르주아적인 '세계시민사회'와는 구분되는 '세계민중사회'의 형성, 제국주의지배에 대항하는 세계적 수준의 대항권력의 형성 등을 추구하고 있다. 민족주의적 대응은 '진보적 민족주의국가들 간의 연대를 통한 대응'을 추구하고 있다. 그 외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수준에서 '자율성을 지니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형성' 등을 내세우는 문명비판적인 환경운동 차원의 대응, 전투적이지만 자율주의적인 네트워크 이상의 건설을 반대하는 무정부주의적인 대응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현 시기의 국제연대투쟁에서는 그러한 제반 조류들이 뒤섞여 있는 가운데 갈수록 급진화되고 있고, 반자본의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민

주의적 조류, 부르주아적 NGO 운동 차원의 조류들이 점차 주류적 지위에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¹³⁾

5. 세계체제의 장래

1970년대 중반 이래의 자본주의의 장기적인 구조적 불황은 크게 보면 다음의 3 국면을 거치면서 전개되고 있다.

① 1980년대: 이 시기는 제2차 세계자본주의체제가 징후적 위기국면을 겪은 시기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과 일본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동아시아권만이 번영을 누렸다. 그리하여 '일본으로부터 배우자', 자본주의 발전의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동아시아적·유교적 자본주의' 론 등이 크게 부상했다. 유럽과 미국의 뒷뜰인 남미와 아프리카 역시 심대한 '발전의 위기'를 경험했다.

② 1990년대: 이 시기에는 전 세계의 희생 위에서 미국자본주의의 미증유의 호황을 누린 반면 일본이 장기불황에 빠져들고 동아시아지역 역시 심대한 경제위기에 빠져들었으며, 동아시아의 위기가 러시아에서의 위기로, 다시 남미로의 위기로 확산되었다. 미국이 미증유의 호황을 누리며 따라 정보통신산업이 중심이 된 이른바 미국의 '신경제'에 대한 새로운 낙관론이 크게 대두했다. 그러나 미국의 호황은 생산성의 증대 등에 일차적으로 기인하기 보다는 '미래의 수익에 대한 기대'가 불러일으킨 거대한 과잉투자자와 세계 전체에 대한 금융적 수탈의 강화에 기본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 일본경제의 경우 1980년대가 아리기가 말한 '좋은 시절'에 해당한다면, 미국경제의 경우, 그리고 미국이 세계경제에 대해 차지하고 비중에 비추어 크게 보면 1990년대는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좋은 시절'에 해당하며, 이전의 자유기업주의적 제국주의체제가 초국적 금융자본 지배의 자유금융주의적 제국주의체제로 확고하게 변모된 시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

13) 반신자유주의 국제연대에 참여하는 세력들의 동향, 연대의 성격 등과 관련해서는 덕 니콜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 '세계사회포럼'에 관한 호주 민주사회당(DSP) 전국위원회 보고서 —>, 《진보평론》 9호 참조.

의 호황은 위기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라, 위기의 심화 및 최종적 위기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③ 2000년 이후: 2000년에 들어와 미국에 불어닥친 주가폭락사태로 인해 '신경제'에 대한 그간의 낙관이 환상임이 드러나며, (중국을 제외한) 선진자본주의와 세계자본주의체제 전체가 다시 장기적 불황국면으로 빠져들게 되는데,¹⁴⁾ 이 장기불황은 '제2차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최종적 위기국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장기불황은 이전의 경우에 미루어 볼 경우 국가개입과 국제적 공조체제의 강화 등으로 공황발생이 저지당하지 않는다면 — 그러나 이 경우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장기불황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 2010년대 중반 경에 세계적 수준에서 파국적인 대공황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세계자본주의체제는 장기간에 걸친 극도의 아나키 상태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제3차 자본주의세계체제가 성립될지, 아니면 자본주의체제의 최종적인 몰락이 일어날 지, 아니면 인류 공멸의 위기가 발생할 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히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월러스틴의 말을 빌린다면, 우리는 적어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아는 세계의 종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¹⁵⁾

지금까지의 논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점들이 아울러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일차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신자유주의적체제로의 전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진척 등과 같은 위기극복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자본주의체제가 장기불황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가이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하게는 초국적 독점자본 부문의 과잉축적이 이윤율의 저하를 지속시키고 있는데, 초국적 독점자본의 지배력과 국가적 지원 등으로 인해 초국적 독점자본의 과잉축적된 부분의 대대적인 폐기나 대규모적인 가치절하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과잉축적의 위기'는 생산과 소비의 모순을 증대시켜 항상 '과잉생산·과소소비의 위기'를 동반하게 된다. 이런 사태에 직면하여 세계은행, IMF 등은 최근에 케인즈주의적 처방을 일정하게 도입하려는

14) 미국이 다시 장기불황에 빠지게 된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로는 김수행, 이강국, <최근 미국 경제의 호황과 불황>, 서울대 경제연구소, 《경제평론》 제40권 제2-3호, 2001년 9월, 105-127쪽 참조.

15) 월러스틴, 《우리가 아는 세계의 종말》, 창작과 비평사, 2001.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잉축적의 위기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조건 속에서 행해지는 케인즈주의적 처방은 위기과정의 해결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위기를 한층 더 지속시키는 역할을 행하게 된다. 때문에 세계자본주의체제가 현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안정적 발전국면을 맞이하려면, 초국적자본에 집중된 과잉축적 부분의 대대적인 폐기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그 외에도 노동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생산체제의 도입과 더불어 임금수준의 더 많은 인하, 노동강도의 더 한층의 강화 등이 요구된다. 그런데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이루는 군사적, 정치적 수단이 '전쟁'이나 '파시즘체제의 수립'과 같은 것이라면 —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미국이 (부시행정부의 출범으로 더욱 노골화되고 있지만) '군사케인즈주의적, 군사모험주의적' 노선으로 경도하고 있는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 그 경제적 수단이 곧 '세계적 대공황'이다. 때문에 세계적 대공황의 폭발 등은 계급투쟁을 격화시켜 자본주의의 사망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거침이 없이는 자본주의의 안정적인 새로운 성장국면의 도래란 불가능한 일이다. 나아가 자본주의가 다시 새로운 안정적인 성장국면으로 진입하고 세계 노동자계급 및 인민대중에 통합력을 발휘하는 세계체제로서 재조직되려면, 새로운 생산기반의 확립과 더불어 현재와 같은 금융자본지배체제의 폐기와 산업자본지배체제로의 재전환, 세계적 빈곤의 해결, 적어도 중위자본주의국까지는 사민주의적 통합책의 강구 등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사태의 진전은 현재로서는 어디까지나 추상적 가능성에 불과할 뿐이다.

신자유주의적체제로의 전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진척 등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체제가 장기불황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우리는 조절이론의 이론적 한계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즉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와 케인주의적 조절양식에 기초한 자본주의구성체가 위기 발생을 매개로 유연적 축적체제와 신자유주의적 조절양식에 기초한 새로운 자본주의구성체로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게다가 그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은 그 위기가 축적체제와 거기에 조응하는 조절양식 보다 더 심층적인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둘째, 세계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된 이후 미국의 최대의 관심사는 소비에트블록이 붕괴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다른 중심부국가들 사이

의 관계를 재조직화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1989년 이후 미국이 다른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에 일차적 목적을 두었다는 사실은 주류 앵글로아메리카의 국제관계 문헌에서는 금기시된 주제였지만, 서유럽과 일본은 미국의 세계지배에 대한 잠재적으로 유일한 주요한 정치적·경제적 도전자였다. 실제로 그들만이 미국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독자적 축적형태를 조직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와 경제의 측면에서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세계와 구분되는 대안적인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을 제공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 1990년대에 EU국가들은 성장한 경제적 힘을 배경으로 정치적 지역주의를 발전시키고 자본축적의 지역화된 형태와 결합된 보다 순수한 유럽안보 공동체를 추구했으며, 러시아와 유기적 관계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동구권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동아시아로의 경제적 진출을 힘쓴 일본은 남한, 대만,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하는 지역적 정치경제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EU와 일본의 그러한 노력은 미국의 활동을 제한하고 그에 도전할 수 있는 세계적인 정치·경제질서의 여러 영역에서 새로운 동맹체를 발전시킬 가능성도 있었다. 이에 대해 미국은 1980년대 이래 전 세계적 규모로 작동하는 미국자본주의의 힘을 증대시키고 그 활동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힘을 쏟았으며, 이를 위해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활동에 대해 강력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해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를 관철시키고, 이에 기초하여 '세계경제의 미국화'에 성공했다. 그러나 냉전시기 중심부국가들의 군사적 후견인 역할을 행한 미국의 능력은 소비에트블록의 붕괴로 상실되었고, 중국의 성장과 중국의 세계경제로의 강력한 가속적인 진입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나아가 미국의 중심적 지위에 대한 EU국가들과 일본, 특히 EU국가들의 잠재적이지만 중대한 정치적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국제제도들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관리에 도전하면서 세계관리에 있어서 보다 동등하고, 규칙에 기반한 메커니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들은 미국에 대한 강한 충성심을 일반적 수준에서 표현하고 미국과의 어떠한 정치적 대결도 신중하게 회피하는 것이면서도, 미국의 힘에 대한 중요한 위협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갈등은 기본적으로 광범위한 공통의 이해에 기초해 있는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제3세계의 새로운 경제개방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제3세계에 대한 통제

와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에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1980년대에 미국이 제3세계국가들의 국가를 통제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주창하기 시작한 이른바 '제한적 주권독트린', 즉 국제공동체는 어떤 국가가 중심부의 중요한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행하면 개입할 수 있다는 근본적 쟁점에 대해서는 공통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1990년대이래 주변부국가들의 중대한 도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른 중심부 국가들은 제3세계국가들의 잠재적·현실적 위협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미국과 커다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남반구 문제에 대처함에 있어 비군사적이고 보다 정치적인 해결책, 또는 유엔의 지원에 기반하고 국제법에 근거한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부시 정부는 타 중심부국가들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을 버리고 자국의 이익 관철만을 앞세우는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일본 및 기타 아시아 국가들 간의 경쟁적 관계를 방관하던 '중립적 권력'으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여타 국가들을 양극구조 속에 몰아넣어 미국의 편에 서도록 강제하고 있다. 나아가 오늘날 미국의 핵심적인 군사 전략은 '핵미사일방어계획' (Nuclear Missile Defence)인데, 이 계획은 이른바 '불량 국가들'의 위협을 제거하고 중국과 같은 핵보유국가들을 굴복시키는 동시에 다른 중심부자본주의국가들을 보다 강력한 안보종속으로 편입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다른 한편,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에 이르면 미국의 세계지배를 위협하는 제3세계의 심각한 도전은 거의 소멸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90년대에는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자신이 수립해 온 국제질서에 반대하는 심각한 민중저항에 직면하지 않게 되었으며, 밀로세비치 치하의 유고슬라비아, 루카센코 치하의 벨로루시, 서구의 영향권을 벗어나 있는 몇몇 산유국 및 북한과 쿠바와 같은 일탈적 국가들은 주변화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그러나 주변부·반주변부국가에서 이루어진 (신자유주의적인) 정치적·경제적 재조직화에 따른 빈곤의 확산과 미국금융자본 중심의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한 금융적 수탈의 미증유의 증대는 미국에 대한 제3세계 민중의 불만을 급속도로 누적시키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 반미투쟁 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은 그러한 미래의 위협요소들과 투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① 국가의 주권성 보장이라는 유엔의 원칙을 약화시키고, 그러한 주권

국가들에 개입할 수 있는 국제공동체 — ‘유엔상임이사국’ 이 아니라 ‘중심부국가들’ —의 권리라는 새로운 ‘제한적 주권 독트린’ (doctrine of conditional sovereignty)의 확립, ② 위협국가들에 대한 경제봉쇄(economic blockade) 및 ③ 국내반란군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과 함께 공중폭격 등이 포함된 ‘현대적 포위전’ (modern siege warfare)의 전개와 같은 새로운 기법을 개발했다. 밀로세비치 치하의 세르비아와 후세인 치하의 이라크는 이러한 새로운 원칙이 적용된 대표적인 희생물이 되었다.

다른 한편, 중동지역에서는 초기 대중공산주의운동의 파괴 이후 1960년대와 70년대에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에 가장 심각한 위협을 준 것은 ‘세속적 아랍민족주의’ 운동이었다. 이 조류와 대항하기 위하여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미국의 중동 거점으로 삼는 동시에 이들 국가에게 보수적 이슬람운동을 육성하도록 조장하였다. 특히 1970년대 말의 이란혁명 이후 미국은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로 하여금 급진적이고 반동적인 ‘수니파’를 보다 호전적인 형태로 육성하도록 지원하였고, 사우디 아라비아정부와 파키스탄정부가 소련의 지원을 받는 아프가니스탄의 좌파정권과 소련 군대에 대항하는 전쟁을 치르도록 이슬람의 보수적 혁명세력들의 성장을 조장했다. 이를 배경으로 미국은 세속적 민족주의세력의 성장을 막기 위해 1990년에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토에 미군기지를 설치했다. 이후 후의 중동 정세는 ① 이스라엘점령지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중들에게 가하는 억압에 대한 미국의 묵인, ② 앵글로아메리카의 봉쇄정책의 결과로 인한 이라크인들의 고통의 가중(1990년대에 모두 약 120만명이 사망하고, 약 50만명의 어린이들이 기아로 죽음)과 봉쇄정책으로부터의 아랍국가들의 이탈 (쿠웨이트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아랍국가들이 이라크포위전의 지속에 반대함) —, ③ 이로 인한 미국과 중동지역 아랍국가들 —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도 포함됨 — 의 상호협력관계의 약화 및 ④ 사우디아라비아의 내적 분열 징후 발생 등에 의해 대변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1990년대의 미국의 대중동정책은 ‘자기만족’과 ‘표류’로 특징지어지는 것이었다. ‘자기만족’의 이유는 소련이 붕괴한 데에다가 다른 곳에서는 무기시장이 축소되고 있었던 시기에 중동 내부의 긴장이 중동을 미국 무기수출의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만든 사실 등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표류’의 이유는 중동지역에서의 잠재적인 정치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변화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과거의 정책을 그대로 지속시켰기 때문이다.¹⁶⁾ 그런 가운데 미국에 대한 아랍민중의 분노는 크게 증대하고 있었고, 이를 배경으로 반미노선으로 자신의 노선을 전환시킨 이슬람근본주의세력의 한 분파에 의해 2001년 9월 11일 대미 항공기공격사건이 발생했다. 그렇지만 대테러전의 명분으로 전개한 대아프카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은 쉽게 승리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미국의 패권은 오늘날 외형적으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강화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아랍민중의 분노는 깊어지고 있고, 또 팔레스타인문제나 예상되는 대이라크전 등에 촉발되어 미국에 대한 아랍민중의 저항이 다시 대규모적으로 폭발할 가능성 역시 항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볼 때, 세계자본주의체제의 경제위기가 최종적 위기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한 조건 속에서 미국은 앞으로 더욱 더 일방주의적·군사주의적 노선으로 경도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이에 대한 다른 중심부국가들의 반발이 증대하고 세계노동자·민중의 저항운동이 반미투쟁과 신자유주의반대투쟁을 결합시키는 가운데 갈수록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전의 영국의 세계적 헤게모니가 독일의 도전과 미국의 부상 등으로 제1차 세계자본주의체제가 장기적인 구조적 위기국면에 접어들면서 무너졌었다. 이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미국을 대신해 세계체제를 다시 새로운 안정적 발전국면으로 발전시킬 능력을 지닌 국가란 존재하지 않으며 — 혹시 중국이 그런 역할을 담당할 일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 앞으로도 그런 국가가 출현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미국의 패권은 앞으로도 지속되겠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적어도 1990년대 이후부터는 더 이상 그람시적 의미의 세계적 헤게모니국가로서 규정될 수 없다는 점이다.¹⁷⁾

16) 피터 고완, <9.11 대미 테러사건과 세계정치>, 《진보평론》 제10호(2001년 겨울호) 참조.

17) 여기서 말하는 그람시적 의미의 헤게모니란 동위의 계기만을 특권화시키는 신그람시주의자들이 말하는 헤게모니가 아니라 헤게모니가 억압과 양보의 양 계기를 모두 지닌 것으로 파악한 그람시의 본래적 헤게모니 개념에 합치하는 헤게모니를 말한다. 그리고 헤게모니체제란 억압의 계기가 더 중요하던 아니면 양보의 계기가 더 중요하던 피지배대중을 체제에 성공적으로 통합시키고 있는 체제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비헤게모니체제는 더 이상 그러한 통합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체제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다.

5. 결론

제1차 세계자본주의체제가 최종적 위기국면에 접어든 1914년에 발생한 사라예보에서의 총성이 극단의 시대, 혁명과 반혁명의 시대였던 20세기의 문을 연 첫 신호탄이었다면, 제2차 세계자본주의체제가 최종적 위기국면에 접어든 2001년에 일어난 9.11대미테러공격사건은 21세기의 문을 여는 첫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그런 가운데 오늘의 이 시대 역시 여전히 신자유주의시대이고 오늘 이 시점에 도 신자유주의적 발전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우리의 귀를 멍들게 만들고 있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의 한계는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신자유주의적 발전의 길로 계속 나아가는 한 인류에게 찾아올 것은 절망과 고통, 새로운 야만과 새로운 케이오스 이외에는 없다는 사실 역시 분명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점은 인류 모두가 ‘자본의 자유’ 대신 ‘인민의 자유’를, ‘경쟁과 황금 추구’ 대신 ‘우애와 연대적 결합’을, ‘적자생존의 장글적 삶’ 대신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을 쟁취하기 위한 진지한 모색에 나서야 할 시기이며, 작은 실천을 큰 실천으로, 일국적 실천을 국제적 실천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이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꽃 피우고, 야만 속에서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키며,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 내는 것이 역사의 간지인지 모른다. 그러나 역사의 간지는 그 간지를 실현시키려는 인간의 노력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새로운 희망, 새로운 문명,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 금융감독원(1999), 금융기관 부문 아웃소싱 관련 자료.
- 김석진(2001), 《자본주의의 위기와 역사적 자본주의》, 공감.
- 김수행(1992), 〈자본의 세계적 재편과정과 노동자계급〉, 《이론》 창간호(1992년 여름호).
- 김수행·이강국(2001), 〈최근 미국 경제의 호황과 불황〉, 서울대 경제연구소, 《경제평론》 제40권 제2-3호.
- 김영순(1995), 〈복지국가재편의 두개의 길〉(서울대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호기 편역(1995), 《포스트 포드주의와 신보수주의의 미래》, 한울
- 백창재·손호철(2000), “패권의 부침과 국제질서: 팩스 브리타니카와 팩스 아메리카, 그리고 그 이후”, 오기평 편저, 《21세기 미국패권과 국제질서》(오기평교수 정년퇴임기념 논문집), 오름.
- 윤소영(2001), 《이윤율의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비판》, 공감.
- 임광빈(1995), 〈세계화(Globalization)와 초국적 기업 — 초국적 기업의 세계정치경제전략 비판〉, 《세계정치경제》 제2호.
- 임마누엘 월러스틴(2001), 《우리가 아는 세계의 종말》, 창작과 비평사.
- 피터 고완(2001), 〈9.11 대미 테러사건과 세계정치〉, 《진보평론》 제10호(2001년 겨울호).
- Althusser, Louis (1982), *For Marx*, New York: Vintage Books.
- Arrighi, Giovanni (1990), “The Three Hegemonies of Historical Capitalism,” *Review* XIII, 3, Summer.
- _____ (1994), *The Long Twentieth Century: Money, Power and Origins of Our Times*, London/New York: Verso.
- _____ (1999), “The Global Market,” *Journal of World-Systems Research*, Vol, 2.
- Burrows, R. and B. Larder eds. (1994), *Towards A Post-Fordist Welfare State?*, London: Routledge.
- Hardt, Michael and Antonio Negri (2000), *Empire*, Harvard University Press.
- Jessop, Bob (1993), “Towards the Schumpeterian Workfare State”
- Mahnkopf, B. ed. (1988), *Der gewendete Kapitalismus*, Muenster: Verlag Westfaelisches Dampfboot.

The Developing Tendency of Contemporary World System

Kim, Se-Kyun*

Contemporary World System comes within the view of the long-term structural critical phase of the second World System made by United States after the Great Britain. It can be prescribed as a Neoliberal World Capitalist System under the control of the transnational financial capital. Neoliberal structural reform represented by Thatcherism and Reaganomics transformed the Fordist accumulation system into the flexible post-Fordist accumulation system through the fruit of science and technology revolution. Transnational capital initiated this process. Through the spreading globalization of the capital and the production, the interdependence of the nations was increased and the controlling power of the transnational capital to the world capitalism was strengthened. Simultaneously, state control to the capital movement and state power to the domestic regulation was weakened. In 1990s the control power transnational financial capital led by American financial capital spreaded overall the world. The increase of speculative exploitation made by the transnational financial capital made the third world more destitute, the world economy more unstable.

The social effect of the neoliberal structural reform was the extinction of the state's relative autonomy, fragmentation of the individuals, and the retreat of the socio-economic democracy through the increase of the income differential. The powerful drive to the neoliberal structural reform put the labor class on the defensive. After the middle of the 1990s, however, the injury of the neoliberal aggression increased cumulatively and th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Political Theory, European Politics; Democracy in Korea and the labor · mass politics(Seoul: From site to the future Press, 1997).

resistance from the below began activated. Strengthened anti-neoliberalist struggle from various fields jointed the labor class struggle. Such as anti-globalization struggle at the Seattle, their solidarity spreaded internationally.

The booming stage of the United States in the 1990s owed to the over-investment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financial exploitation. In the 2000s, as a result, the economy of the US and the world run into the long-term recession stage. In the condition that the economic crisis of the world capitalist system turns to the ultimate crisis stage, United States seems to devote herself to the unilateral, militant course. In contrast, the repulsion of the other central states and resistant movement of the international labor class and the mass seem to be strengthened. Though for some time there are no other country to substitute the hegemony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United States cannot be defined as a Gramscian hegemonic state of the world after the beginning of the 1990s.